

제428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임시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8월21일(목)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기업부 소관

다. 특허청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1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기업부 소관

다. 특허청 소관

(14시10분 개의)

○소위원장 장철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 이후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철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이번 결산심사와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결산을 심사합니다. 결산심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하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예산집행에 부당한 부분은 없었는지, 사업별 목표한 성과는 잘 달성되었는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날카로운 지적과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해당 기관들도 위원님들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결산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소위원장으로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다. 특허청 소관

○소위원장 장철민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별, 항목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자료에 기재된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거쳐 사업별로 시정요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부 측에서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질의를 짧게 생략하고 다음 항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항목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는 경우 해당 항목을 보류하였다가 추후 보류 항목만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출장 중인 관계로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결산 시정요구의 유형과 최근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 통계 등에 대해서 박희석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한 장짜리 자료, 시정요구 유형 및 분류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의 유형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분류 기준과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재산에 금전적인 손실을 입힌 경우가 되겠습니다.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로 유형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시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추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주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합니다.

제도개선은 법령 또는 제도에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대의견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은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로 다루기 곤란한 내용으로서 큰 틀에서 정부에 정책방향을 제시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내지 직접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시정요구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최근 3년간 결산소위원회 시정요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모두 합해서 시정이 3건, 주의가 10건, 제도개선 118건으로 함께 131건이 있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해서는 변상이나 징계, 시정은 없었고 주의가 12건, 제도개선 176건으로 함께 188건이 있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관련해서는 시정이 1건, 주의가 29건, 제도개선이 142건, 함께 172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이 있거나 하지는 않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특허청 소관 결산소위 심사자료입니다.

1쪽입니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시정요구,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적기 수입조치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명은 기타재산이자수입입니다.

지적사항은 IP활용 창업·성장 지원 및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이 2023년에 완료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산 과정의 지체, 행정처리 미숙 등의 원인으로 2024년에 반납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고, 특허청은 보조금 정산의 기한과 절차를 명확히 설정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가 적기에 수입 조치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는 주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특허청장 김완기 특허청장입니다.

지적사항을 수용하며 앞으로 관리를 강화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수용 의견 있었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쪽입니다.

가산금 적정 세입 과목에 편성 필요 등입니다. 관련 사업명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의 납부기한 경과 시 부과하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과태료 세입 과목으로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과태료 징수결정액 29억 7200만 원 중 99%인 29억 4200만 원이 미수납 상태라는 지적이 있었고, 특허청은 가산금·증가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 과목이 아닌 가산금 과목으로 편성하고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특허청장 김완기 지적사항 수용하며 앞으로 세입항목에 맞게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3쪽입니다.

일반용역비 계획적 편성·집행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심판처리지원입니다.

지적사항은 최근 3년간 매년 일반용역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 조정을 통해서 일반용역비를 집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사항으로 특허청은 예측 가능한 사업의 경우 예산을 편성하여 계획적으로 집행하고 당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세목조정을 통해 일반용역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특허청장 김완기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일반용역비 예산 편성·집행을 보다 계획적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의견이 복수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간단히 듣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 얘기한 제도개선 의견으로 정리할까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네 번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공백 최소화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지식재산 창출지원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비용은 국비와 지방비가 50 대 50의 비율로 충당되는데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지방비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지원이 일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특허청은 생애주기별 IP 기반 지원 사업을 사업 간 연계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방비 매칭 여건을 보장하는 등 센터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특허청장 김완기 지적사항 수용하며 앞으로 예산 확대 등을 통해서 기업들이 센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아니,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지금도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허청장 김완기 예산 부분도 계속 확대를 해야 되고요.

○구자근 위원 아니, 지금 지방 매칭 안 되어서 혹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경우가 빈번한지……

○특허청장 김완기 지금 자체도 사실은 50 대 50 매칭 자금으로 돼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아니, 돼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어떡하지요, 매칭이 안 돼서?

○특허청장 김완기 지자체와 계속 긴밀히 협의하면서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자근 위원 협의는 어떻게, 당장 부족해서……

이게 지금 창업 단계부터 해서 해외 진출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는 건데, 지금 안 그래도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지방하고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격차가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이런 부분까지 격차가 생겨서 매칭이 되지 않을 때 특허청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막연하게 그냥 예산을 좀 더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 마시고.

○특허청장 김완기 지자체랑 같이 하는 정책협의회가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맞춰 나가는 노력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구자근 위원 그건 너무 막연하고, 그렇게 협의를 통해 맞춰 간다 하는…… 확실하게 뭔가가, 좀 답답한 지자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특허청장 김완기 중앙비 자체는 저희가 계속 확대해 나가는 추세로 돼 있는데 지방비가 조금……

○구자근 위원 지금은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 지자체에서 모자라면 인근 지자체에 남는 지식재산센터에서 조금 같이 보태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들로 하고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특허청장 김완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돼 있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구자근 위원 그것도 밑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밑돌 괴고 이런 형식인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특허청장 김완기 그런데 기본적으로 중앙비 이슈라기보다는 이것은 지방비 이슈라서 지방비 부분에서 조금 확대가, 파이를 키우는 그런 형태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자근 위원 생각만 갖고 계시지 말고 그걸 요청을 하고 로비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특허청장 김완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사실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들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사항으로 우리가 시정요구 유형을 정할 때는 이후에 어떤 방식의 제도개선이 있을지 계획들을 조금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포함해서요.

○특허청장 김완기 예, 저희가 나중에 제도개선 어떻게 했는지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재관 위원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지식산업의 소중함 부분에 대한 인식이 제고가 된다면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자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자치단체에서의 회의, 그런 계기를 통해서 지식재산의 소중함에 대한 각 부서가 갖는 관심도를 높이는 그런 것들은 저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허청장 김완기**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번 얘기도 했었는데……

○**이재관 위원** 그런 지역은 전혀 문제없지 않습니까?

○**특허청장 김완기** 올해도 그런 활동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님하고 만나는 활동도 조금 강화해서, 단체장님들이 사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지식재산 자체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5쪽입니다.

발명교사 인증제도 활성화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발명교육 활성화(초·중·고)입니다.

이에 대해서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교원 숫자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24년에는 인증제도 중 최상위 등급인 명인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없는 등 발명교사 인증 수요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교원에게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발명교사 인증에 대한 수요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특허청장 김완기** 지적사항을 수용하며 발명교육 대상자, 수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제도개선 사항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건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6번입니다.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설치 사업의 지연 방지 및 계획적 예산집행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발명교육 활성화(초·중·고)입니다.

지적사항은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설치 사업 진행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연도에 배정된 예산의 집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는, 특허청은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설치 사업의 추가적인 지연을 방지하고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예산을 계획적으로 편성·집행하며 중부권의 거점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또는 주의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특허청장 김완기** 지적사항을 수용하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북도교육청과 지속 협력하고 사업계획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

○특허청장 김완기 주의보다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측은 제도개선 요구로 정리하고자 원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입니다.

7쪽, 매입 담보 산업재산권의 담보가치 제고 및 활용 강화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입니다.

이에 대해 특허기한이 제한된 산업재산권의 특성상 활용되지 못한 매입 담보 산업재산권의 가치가 감가상각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매입한 담보 산업재산권의 활용·수익화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로는,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의 적정 가치 설정 및 담보가치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매입한 담보 산업재산권이 적시에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특허청장 김완기 지적사항 수용하며 담보 IP 적정 가치 설정 및 가치 제고를 위해서 특허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회생 부분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서 매입한 지식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 요구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8번입니다.

특별사법경찰 및 부정경쟁행위 조사관 특정업무경비 현실화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입니다.

2024년에 특별사법경찰 및 부정경쟁행위 조사관에게 특정업무경비로 매월 10만 9000원을 지급했는데 제도의 중요성, 매년 달성하는 성과 및 타 기관 수사·조사 업무 담당자의 특정업무경비 지급액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는, 특허청은 특별사법경찰 및 부정경쟁행위 조사관의 적정 정원을 확보하고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특정업무경비 지급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특허청장 김완기 지적사항을 수용하며 정원 확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겠고요.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는 사실 현실화가, 지급액을 높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정업무경비 이외에 다른 특정직무수당이라든지 초과근무시간 배분을 좀 더 많이 늘린다든지 해서 처우 현실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처우 문제로 한마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재관 위원 업무의 전문성에서 분명히 타 부처하고 차이가 있나요? 기본 단가에서 차이가 이렇게 있을까요?

○특허청장 김완기 재정 당국 얘기로는 지금 특허청 조사관들이 받고 있는 수준이 한 10만 원대가 되는데 제일 못 받고 있는 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5만 원 정도 받고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보다 많이 받고 있는 데도 있고, 사실 이것은 특정업무경비 자체를 많이 줄여 나가는 추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재정 사정도 있고, 저희는 어쨌든 특정업무경비보다는 사실 심사관, 심판관들 같은 경우는 특수직무수당이라고 해서 별도로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처럼 수사관, 조사관들이 받을 수 있는 수사·조사 수당을 신설해서 그런 쪽으로 현실화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승진이라든지 다른 처우는 제가 열심히 개선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관 위원 이 내역을 보기 전에는 책임운영기관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타 기관에 비해서 좀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체는 그것하고 거꾸로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특허청장 김완기 지금까지 그랬던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관 위원 상향 조정하는 것도 일정 부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 의견을 준 거거든요.

○특허청장 김완기 특정업무경비로 하려면 책임운영기관이긴 하지만 기재부랑 다 협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당국에서 특정업무경비 자체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협의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권향엽 위원님.

○권향엽 위원 이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경찰이라든가 검찰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또 사법경찰 역할을 하는 이분들하고의 어떤 기준 단가라든가 그런 것이 있나요, 정부에?

○특허청장 김완기 예산 사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청이나 다른 쪽은 저희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특허청에서 하는 특별사법경찰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것을 단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사실은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사기 진작을 감안해서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허청장 김완기 예, 제가 청장 취임한 이후에 작년부터 해서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 승진상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계속적으로 마련해서 하고는 있는데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만 시정요구사항에 ‘특정업무경비 지급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는데 위원님들

이나 청장님 취지가 이것에 상당하는 특수임무수당 등 다른 인건비 증액으로 아마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시정요구사항도 일부 좀 조정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9쪽입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 규율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입니다.

해외 주요국은 온라인을 통한 상표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상품의 판매중지 조치를 함으로써 상표권 침해 책임이 면제되도록 하는 ‘신고에 기반한 조치의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위조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특허청장 김완기 지적사항 적극 수용하며 앞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플랫폼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상표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10번입니다.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분류 및 분석·제공 개선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적사항은 국가핵심기술 관련 모니터링·분석 결과의 활용 절차에 관하여 기관 담당자간의 비공식적·구두 회신에 의존해서 공유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출원된 특허에 대한 국가핵심기술과의 구체적인 관련도 산정 및 타 기술분류와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정요구는, 특허청은 국가핵심기술 분석 결과에 대한 수요기관의 개선 사항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침 및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라는 내용과 특허청은 관련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여 기술분류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중요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도 평가를 우선 실시하는 등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특허청장 김완기 첫 번째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수요기관과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관련 지침을 연내에 마련하겠습니다. 두 가지 시정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용해서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 분석 품질 제고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박상웅 위원님만 주의로 요구를 주셨는데 내용적으로는 제도개선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박상웅 위원 지금 특허청 특허심사총괄과의 진행 과정을 보면 분류코드 설계, 신규 특허출원 그다음에 국가핵심기술·방위산업기술 분류코드 부여 그다음에 특허기술동향·권리변동 등 모니터링 및 분석, 관계 부처에 이를 제공하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 지금 형식적으로는 특허 출원 단계에서 국가핵심기술하고 방산기술 여부를 판단해서 분류코드를 부여하고 또 분석 결과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특허출원에 있어서 그 기업이 출원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이게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특허청이 확인해 달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류하든지 자진신고하도록, 거기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형식은 이렇게 돼 있지만 별도의 국가 주요 기술이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신청을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출원 내용을 가지고 ‘이게 국가핵심기술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허청에서 주의해서 봐야 된다’ 이라고 하지 않는 한 특허청이 형식적인 절차는 있어도 이를 소홀히 하고 진행되니까 누락이 되고 빠진다.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너희가 처음부터 신청을 했어야 될 것 아니야, 신고하고’ 이렇게 물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절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하지 않는 반강제된 그런 특허청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허청장 김완기 그러니까 출원인에 부담이 안 되도록 특허청이 관계 부처랑 같이 협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국가핵심기술 유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산업부에서는 좀 소홀하게 대응을 하고 뒷북치듯이 대응하고 늘 그래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술인가 특허청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심사 절차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에만 의존해 가지고는 안 되니까 분류코드를 잘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저절로 체크되도록 하는 그러한 구체적이고 섬세한 제도가 확실히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그걸 했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자꾸 이렇게 소홀히 하니까 제가 주의를 요구한 건데 위원님들의 다수 분위기가 보니까 부드럽게 가자는 취지 같은데,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되 이 제도개선은 반드시 해야 된다.

○특허청장 김완기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예산 문제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예산 당국이랑 얘기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도 반영을 했고요. 올해 사업도 다른 데에서 좀 돌려 가지고 이런 분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요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1쪽입니다.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합니다. 관련 사업은 사회복지요원운용 그리고 사회복지요원운용(총액인건비)입니다.

지적사항은 2024년에 예상 근무인원 및 보수에 근거한 예산 추계가 부정확해서 인건비

를 포함한 사회복지무요원운용 사업의 집행률이 낮았고 최근 4년간 이러한 집행을 부진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특허청은 적정 사회복지무요원 인원 및 보수에 근거한 예산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집행을 부진 문제를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특허청장 김완기 지적사항을 수용하며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는 2025년 6월 기준으로 거의 49% 집행돼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요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마지막으로 12번 여유재원의 규모 축소 및 활용방안 강구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일반회계 전출 그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입니다.

지적사항은 2024년에 발생한 여유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거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였는데 연례적으로 여유재원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기금에 예탁하는 것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여유재원의 일반회계 전출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여유재원을 특허청 심사관 추가 확보를 통한 국가기술 경쟁력 강화 등 본래 목적의 고유사업에 관한 예산 부족분을 보충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특허청장 김완기 의견을 수용하며 여유재원이 심사관 확보 등 저회 고유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올 2024년도 결산액을 보시면 370억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그게 사실은 일반회계 전출 쪽으로 분류돼 있는 그 부분이었고요. 내년도 예산안 같은 경우는 재정 당국과 협의를 했는데 4000억을 넘는,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회에 제출될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이런 여유재원이 고유사업에 투입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동아 위원 여유재원이 다른 고유사업에 투입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특허청장 김완기 여유재원이요?

○김동아 위원 예.

○특허청장 김완기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늘려 가지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김동아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여유재원은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허청장 김완기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다른 사업으로 전용이 안 되잖아요.

○특허청장 김완기 공자기금으로 보내 가지고 나중에 다시 받든지……

○김동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시정요구사항이, 여유재원을 특허청 심사관 추가

확보나 이런 데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특허청장 김완기** 여유재원 자체는 사실 어렵고요. 예산 자체를 사실은……

○**김동아 위원**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허청장 김완기** 좀 많이 늘려서 여유재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김동아 위원** 그러니까, 시정요구사항이 좀 이상한 것 아닌가 싶어서요.

○**소위원장 장철민** 설명을 조금 드리면 특허청이 책임운영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정부 부처랑 조금 달라서 특허 관련된 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입은 있는데 예산은 기재부랑 국회가 통제하니까 돈을 못 씁니다.

○**김동아 위원** 그러니까 못 쓰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남은 걸 기재부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말은 책임운영기관이라고 만들어 놓고 사실은 여기에서 생기는 수입을 기재부가 국고로 가져가는 방식이라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사실 저는 이걸 국가재정법상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약간 준조세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이 특허 관련된 수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기재부가 세금을 안 만들고 이쪽의 수입을 국고로 늘상 몇 % 이상씩 가져가는 방식이라서, 저는 사실 책임운영기관인 이상 이것은 정말로 우리 지식재산이나 산업재산 정보 쪽의 발전을 위해 쓰이는 게 맞다라는 생각으로 의견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약간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는, 특허청이 좀 특수한 수입·지출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김동아 위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걸 기재부한테 뭐라 해야 될 것을……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니까 기재부한테 뭐라고 하려고 우리가 이걸 남겨 놓는 거예요. 기재부가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수입을 빼 가는 방식이면 이게 지식재산 산업 전체나 정부 부처, 특허청의 기능이나 어떻게 보면 미래를 좀 빼앗는 일을 기재부가 하고 있는 일이라서 저는 이것은 강력하게 저희 산자위 차원에서 앞으로 재정 당국에 명확하게 저희의 의지를 보여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청장님이 개선해서 오세요, 제도.

○**특허청장 김완기** 예.

○**권향엽 위원** 시정 정도는 가야 되겠는데요?

○**소위원장 장철민** 사실 저희가 시정요구유형 중에는 제도개선 요구 말고는 적절한 게 없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앞으로는 특허청에 생기는 지식재산 관련된 여러 가지 수입들이 재투자되고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 조금 더 강하게 의지와 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허청장 김완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고, 특허청 관련 사항은 일단 자료 배부되는 것을 잠깐 기다려서요……

위원님들 다 받으신 것 같으니까 수석전문위원님, 특허청 관련 시정요구사항, 정리할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특허청 소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관련 2024회계연도 결산 우

리 소위원회 시정요구 결과입니다.

주의가 1건이고 제도개선 12건 해서 소계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장 김완기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앞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빈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리된 자료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허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특허청장 김완기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오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차관 소관 항목을 먼저 심사한 후 2차관 소관 항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산업부 소관 결산소위 심사자료 1쪽입니다.

총괄입니다.

국제부담금 사업 미납액 발생 방지를 위한 예비비 배정·사용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국제부담금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국제부담금 비목은 예상 환율 대비 집행 시 환율이 3~4%가량 높게 나타났고 특히 연말에 납부한 경우 환율이 급등하여 미납액이 크게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부담금 사업 미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예비비 배정·사용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구자근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 제가 지적한 거라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국제부담금 관련해서 미납분이 생겼다는 게 지금 환율 관련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환율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 공색해 보여요.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얼마인데, 그리고 APEC도 열고 있고 그런데 이게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을 볼 때 너무 공색한 변명이다.

이렇게 해서 방금 제도개선 사항에 있었듯이, 기재부가 갑일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협의 해서 예를 들어 예비비에서 기재부 예산충척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좀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권이라도 상관없이 발생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쪽입니다.

R&D 예산 삭감에 따른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 마련 필요합니다. 관련 사업명은 R&D 사업 예산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R&D 예산은 4조 8420억 원으로 2023년 예산에 비해 5494억 원 감소되었고 이러한 R&D 예산 삭감으로 계속과제 3614개 중에 55개 과제가 중단되었으며 2023년까지 중단과제 55개에 기투입된 연구개발비 651억여 원이 매몰비용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로 정부는 R&D 예산 삭감에 따른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집행의 신뢰성 회복 등 향후 미래성장동력인 R&D 예산의 일방적인 삭감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의견 없습니다. 제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3번입니다.

R&D 연구개발비 정산금 징수 관리 강화 필요합니다. 관련 사업은 R&D 연구개발비 정산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R&D 종료과제는 최근 5년간 정산 결과에 따라 적정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64억 3000만 원이 국고로 반납되지 않고 있으며 2020년부터 23년까지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하여 정산금 회수 실적이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산금의 국고 반납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파악하고 정산금 징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의견 없습니다. 제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4쪽 일반회계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해외전문인력유치 사업 홍보 강화 및 효과성 점검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입니다.

지적사항은 사업비 중에 해외전문인력유치 사업의 2024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6배 증가하였으나 일부 사업실적은 저조하게 나타났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향후 해외전문인력유치 사업의 신규사업 및 제도의 인지도,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 설계 적정성 및 실제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도록 하라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의견 없습니다. 홍보 강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5쪽입니다.

기획평가관리비 비목 및 금액 예산 내에 적정 수준으로 사전 편성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해외플랜트진출확대입니다.

플랜트 기자재 수출지원 내역사업은 2024년 기획평가관리비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전액 업무추진비 비목으로 변경해서 정산하였는데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평가위원 수당에 따른 일반수용비, 관리인력을 위한 인건비 보수 등 다양한 비목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기획평가관리비 비목, 내용 및 사업구조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기획평가관리비 비목 및 금액을 예산 내에 적정하게 편성하라는 제도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의견 없습니다. 기평비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은 총사업비 사업기간 및 연차별 배분계획 조정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킨텍스 3단계 건립입니다.

지적사항은, 2024년 예산현액 290억 원은 24년 11월 18일에 킨텍스로 전액 출자되었으나 킨텍스는 이 중 5억 7400만 원만 집행해서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금액이 재이월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우선시공 공사 및 실시설계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사업 지연에 따른 총사업비 사업기간 및 연차별 배분계획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도록 주의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의견 없습니다. 기재부와 협의하여 사업기간에 대한 예산 배분계획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혹시 위원님들……

○김동아 위원 이 사업을 아세요? 공사비가 증액돼 가지고 쉽게 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게 당초 예산보다는 지금 공사비가 대폭 증액돼 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계속 유찰되다가 다행히 추진하는 데 돌파구가 마련돼서 조정하면서 추진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

다.

○김동아 위원 알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차관님, 조금 전에 김동아 위원님이 저하고 비슷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2023년도부터 추진한 거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안 되는 이유가 저는 납득이 잘 안 돼요. 그게 지금이라도 가능한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이게 시공사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 사이에 기자켓값이 올라가면서 몇 차례 유찰이 되면서 원래 계획보다 늦어졌던 면이 있는데……

○서일준 위원 가능하다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서일준 위원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주의로 요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연번 4번입니다.

연말 계약 과다 체결 방지 및 이월·불용률 개선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산업기술정보화및정책지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책연구과제의 38.5%가 12월에 체결되어 2024년 예산 이월률 및 불용률이 증가하였고 연말에 체결된 계약 중 수의계약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연말에 정책연구과제 계약이 과다하게 체결되고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과다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의견 없습니다. 연말 계약 집중도를 낮추도록 최소화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차관님 그 자리에 안 계시면 다른 분이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겠

지요. 이것 보니까 21년도, 23년도 반복적으로 지적돼서 똑같은 지적사항을 받는 겁니다. 연말에 이렇게 계속 받는데 연말에 이런 사유가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사실 저도 실무팀부터 해 봤었으니까…… 예상치 못한 연구용역을 하는 경우가 하반기에도 있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남겨 놓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4/4분기 같은 때 무슨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솔직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자근 위원 계속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구자근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데 연말에 몰려서, 건수에 쫓기다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기존 유사한 연구용역을 했던 데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건수에 쫓기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맞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데 차관님이 안 계셔도 다음에 누군가가 또 와서 제도개선이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 없으면,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앉으면 또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을까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다행히 올해는 3월하고 7월하고 해 가지고 이미 한 82% 정도 실행을 해 놔더라고요.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연번 5번입니다.

팹리스 분야 교육 확대 및 민관학 협업 교육사업 실시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반도체아카데미구축입니다.

지적사항은, 반도체아카데미 사업은 종전에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25년부터 충남·경남 등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있으나 팹리스 분야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과 또 반도체아카데미 사업과 별개로 업계의 수요를 반영해서 민·관·학 협업 기반의 반도체 설계 전문교육 사업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수도권 지역 교육기관, 대전 카이스트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팹리스 분야 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민·관·학 협업 기반 반도체 설계 전문교육 사업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의견 없습니다. 다행히 1차 추경으로 비수도권의 반도체아카데미 교육장 신설 예산이 확보돼서 설계 교육과정을 신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제도개선 사항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6번입니다.

배터리아카데미 체계적 사업 추진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배터리아카데미구축입니다.

2024년 구축 계획한 장비 12종 중 8종은 25년 3월 말에 도입하였고 2종은 5월 말에 도입했으며 나머지 2종은 지방비 입금 지연으로 현재까지도 도입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배터리입문기초과학 등 7개 교육과정 수료율이 70% 이하로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장비 도입 일정을 사전에 검토하고 원격지 소재자를 대상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등 교육과정 수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의견 없습니다. 지적사항 그대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차관님, 배터리입문기초과학 등의 교육과정 수료율이 70% 이하로 낮은 이유가 뭔가요? 어떤 문제인가요? 거리 때문인가요, 지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장소 문제가 아무래도 제일 좀 컸던 것 같고요. 또 이게 이론하고 실습 장소가 나뉘어서 이원화됐던 그런 것들도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런데 원격수업으로 진행을 했을 때 수료율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교육의 효과 같은 경우 좀 덜할 수 있지 않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런 면은 확실히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이걸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아카데미를 수료한 사람들이 제대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추경 하는 데 있어서 추경을 먼저 하다 보니까 정확한 도입·설계 계획 그런 것들이 완벽하지 않은데 추경만 하거든요. 그러면 추경 했던 사업들이, 다른 것 뒤를 봐도 미집행이 많아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추경부터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너무 추경 위주로 가지 않고 계획안이라든가 이런 사전 준비가 철저히 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 만약에 장비도 준비 안 되고 실습 기기가 준비 안 됐는데 추경을 받는 상태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걸 좀 더 세세하게 따져서 추경부터 하지 말고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알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수료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나 아니면 수료자들의 취업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까지 관리를 하고 있나요, 배터리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산업통상자원부배터리전기전자과장 박재정 배터리과장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취업자들에 대한 조사는 다 하고 있고요. 관리까지는 아니지만 개별 교육과정……

○**김동아 위원** 사후적으로 취업률이나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배터리전기전자과장 박재정**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7번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체계적 사업 추진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지속가능경영확산사업입니다.

산업발전법에 따라서 2020년에 종합시책은 수립되었으나 산업부는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발전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종합시책과 정합성 있게 연계·환류되도록 주의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의견 없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그동안 갖추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내년부터는 연차별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수립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보고 중에 언급이 안 돼서, 지속가능경영확산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의, 제도개선으로 나뉘어져 있어서요,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서왕진 위원님, 혹시 제도개선으로 하는 데 동의하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예.

○**소위원장 장철민**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8번입니다.

개정된 장비구축 절차 적극 적용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산업혁신기반구축입니다.

동 사업은 장비구축 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해 신규과제의 실행이 부진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산업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을 개정했으나 여전히 다수의 과제에서 장비구축 절차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신규과제의 추진 시 개정된 장비구축 절차의 적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신규과제의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의견 없습니다. 홍보와 집행 모니터링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9번입니다.

연구비 집행 및 성과관리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산업기술국제협력(R&D)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6개소를 신규로 구축하면서 각 협력센터에 연간 6억 원씩 5년간 총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24년 예산에 6개소를 5년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180억 원을 전액 편성하고 이를 지급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로 산업통상자원부는 6개 글로벌기술협력센터에 지급된 연구비가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당초 목표 대비 성과 도출 여부 등을 꼼꼼히 관리하고 해외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서 해외 연구개발기관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협력 R&D 수행 과정에서 국내 또는 해외 연구개발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제가 중단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관리 시스템 절차를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의견 없습니다. 연차별 사업비 집행 방식으로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실까요?

○**김동아 위원** 집행을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이게 국제 공동연구이다 보니까 첫해에 한꺼번에 초기 소요비용들이 몰린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첫해에 한꺼번에 집행이 많이 됐던 그런 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는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것까지를 감안해서 연차별 사업비가 좀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뒤에도 나오지만 이게 작년에 R&D 예산이 삭감되면서 유일하게 증가한 게 제가 알기로는 국제 글로벌 R&D 예산만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차관님께서 혹시 그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전 정권에서 R&D 예산은 다 삭감하면서 국제 R&D 예산만 다 증가시키고 그것도 일시에 이렇게 180억 원을 집행했다는 부분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관련된 내용 저희 의원실에 보고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의 부분하고 같이 연관된 부분인데.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제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알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저도 사실 그 부분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또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왔을 것 같지 않은데, 5개년 사업인데 1차년도에 모두 다 지급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사후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저한테도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구자근 위원 잠깐만, R&D 관련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러면 한마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R&D 예산 그러면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 때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 페이지에 지나갔습니다만 피해 기업들 관련해서 세심하게 살펴보라고 이야기 있었습시다만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10조 정도가 늘어났습시다, 한 5년 동안. 갑자기 늘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증액하면서 사실은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부정수급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는, 공동의 R&D 부분을 여야 구분 없이 국가 근간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탄탄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데는 다들 공감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더 살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할 말은 많지만……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제도가 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이 건 자체가 작년에 예산 할 때도 굉장히 토론이 많이 있었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김동아 위원 지난 국감 때도 지적이 됐던 거고요.

○소위원장 장철민 차관님께서 집행을 연차별로 나눠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로 관리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고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연번 10번입니다.

확보된 예산의 적시 집행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산업기술국제협력(R&D)입니다.

내역사업인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의 신규 연구과제의 2024년 말 총연구비 실집행 실적은 70억 7900만 원으로 실집행률이 전체 금액의 17.6%에 불과하였고 전체 48개 신규 과제 중에 46개 과제에서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신규과제 예산편성 시 실제 협약 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한 편성 등 확보된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강구하고 협약 체결이 지연된 과제에 대해서는 진도 점검, 단계 평가 등 과제관리 및 평가에 만전을 기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의견 없습니다. 해외 기관의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나 추진 과정에서 장기간 협의가 필요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

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이 부분도 같이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이게 총예산이 575억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맞습니다.

○**오세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중에서 여기 해외 연구기관이라는 게 모호한데, 이게 문제됐을 때 사업을 중단하거나 회수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글로벌이라는 말에 우리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 그러면 국내도 사실 회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단되고 이랬을 때 이것을 회수하거나 어떤 것을 제재하거나 할 수 있는 것, 정부가 보증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정확해야지만 해외하고 관계 설정을 하지, 개인 민간이나 일부 외국의 사단법인 기관하고 했을 시에는 R&D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몇 달 과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면밀히 깊게 생각을……

575억인데 지금 집행률이 70억 7900만 원 정도, 그러면 17%인데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아 위원** 차관님, 저도 이 부분 관련해서 제보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사실. 이게 IP 확보나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해외 기관에 돈 뿌려 주는 그런 사업일 수가 있다는 내부적인 제보도 몇 번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특히나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 다 삭감하면서 해외 R&D 예산은 엄청나게 증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관님께서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특별히 제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더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11번입니다.

특화단지 지원사업 다년도 예산 지원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포항 그리고 울산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원입니다.

지적사항은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사업 특성상 장기간 공사가 실시됨에도 단년도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서 예산 지원 종료 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년도로 예산을 편성·지원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권향엽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권향엽 위원 이것 같은 경우 만약에 지금까지 제도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장기간 공사가 실시가 돼야 됐는데 단년도로 끊어 놓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를 못 하고 그 상태에서 머물고 더 진척을 못 하고 그런 상황들도 분명히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없었습니다.

○권향엽 위원 예산이 늘상 그대로 지급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중간에 예산 삭감이라든가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에 차질을 빚지 않게 제도개선을 제대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2번입니다.

신규사업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및 집행 가능성 고려 필요합니다. 관련 사업은 구미국가첨단전력산업특화단지 지원입니다.

지적사항은 구미국가산단에 신설 교량 건설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출연금 200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타당성조사 용역,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이 실시되기 전 단계임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사업 예산편성 시 사업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조사 등 사업 준비 절차와 예산집행 단계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하라는 내용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시의 제·개정 시 관련 법률에 위배되거나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의견 없습니다. 제도개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이것도 내년에 또 할 것 아니지요? 이거 추경 쪽지로 들어온 거지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아무 준비도 없고 집행 단계에서 계획안도 없이 그냥 이렇게 돌아 버리면, 이렇게 돼서 추경만 해 놓고 또 미집행되고 그러면 올해 또 넣고…… 이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사전에 면밀한 계획안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추경이 들어와도 그런 것들이 먼저 앞서서 계획안이 철저히 됐을 때 추경 예산이 돼야지 그냥 예산만 잡아 놓고 미집행된 것을 올해 들어서 또 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소위원장 장철민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지역구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방에 국가산단을 가진 한계일 수밖에 없는데, 저도 국회의원 들어와서 4년 동안 산자부에 이야기하면 국토부에 이야기하라 하고 국토부에 이야기하면 산자부에 이야기하라 하고 핑퐁게임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이 많은 금액을 일시에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수시배정 조건으로 해서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설계나 실시설계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것도 반도체 첨단특화단지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이 금액을 수시배정 받을 수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절대 되지 않는데, 구미의 이 대교가 한 50년 되었습니다. 50년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32t가량 되는…… 공단과 공단을 잇는 곳은 제한을 받았습다, 한 7년 동안. 그러니까 이 센터를 거치지 않고는 1공단하고 2공단, 3공단을 연결하는 교량인데 이쪽으로 32t 이상은 못 가니까 계속 이게 지역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국가공단을 지정할 때 처음 지정받고 인입도로나 진입도로나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해 주지만 그 이후는 지자체로 넘겨 버리고,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산단 내의 SOC 관련해서만 하지 교량, 도랑 이런 부분은 안 되게 돼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제도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핸들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수시배정 받아서 실시설계나 설계나 용역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마중물로 삼아서 도하고 시하고 해서 좀 무리하더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추경 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 부분이 너무 길게 걸리다 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반납을 했습니다만 국토부 산단재생 사업하고 산자부 특화산업 기반시설 사업으로 해서 양 부처와 긴밀하게 잘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지역구를 가진 지방 의원, 저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누군가한테도 계속 다가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한테 맡겨 주시면, 위원님들이 해량을 좀 해 주시면 제가 하여튼 간에 잘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시정 요구하지 않는 걸로 정정 요청하시는 거지요?

○구자근 위원 예.

○소위원장 장철민 저는 같은 지방 지역구 의원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저희가 정말로 지역사업, 특히 산단이든 다른 여러 가지 사업 하다 보면 정말 온갖 방식의 루트를 찾아 해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지혜를 발휘한 사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오세희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고 받아야지요. 준비 하나도 없이, 이게 일부만 사용한 것도 아니고 하나도 사용 안 했는데 그건 아니지.

○구자근 위원 예산의 흐름이나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이해를 하실 건데 ‘당장 그 금액을 받고 왜 안 했지?’ 이러는데 조건이 달린 수시배정으로 받기는 받았고 그 내용적 측면을 보면 조건을 갖추라는 겁니다. 허투루 쓰지 말라고 조건을 달아서 준 거라서 어차피 쓸 수 없는 돈이고 이래서, 물론 그 돈이 누군가가 다른 쪽에 썼으면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지만 지방을 조금 더 생각해 주고 산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루에 4만 3000대 이상이 다닙니다. 초과입니다, 초과.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안전등급이 D등급인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김동아 위원 구자근 위원님이 잘 만들어 오시면 돕겠습니다, 불용 안 되게. 어차피 지방을 살리는 것은 다 똑같은 문제, 국가적 문제니까요.

○소위원장 장철민 사실 구자근 위원님이 굉장히, 앞으로의 사업 관리가 됐든 이후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애쓰실 거라서 저는

그냥 그대로 시정요구 없이 지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정 요구하지 않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 적시 집행 및 본사업 적기 추진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개방형 반도체 종합교육관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지적사항은, 해당 사업은 사업계획 확정과 입찰 준비가 지연된 결과 7월 25일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차년도 2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었고 용역 완료 지연으로 25년 예산 요구 시 개방형 반도체 종합교육관 기본설계비 등 관련 예산을 요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반산업인 반도체 인력양성 관련 예산이 적시 집행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타당성조사 용역에 따른 본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의견 없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제도개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14번입니다.

집행 부진 및 R&D 편중 지원 재발방지대책 마련 필요합니다. 관련 사업은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은 R&D 계속과제 사업비 감액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대출 시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자금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미흡, 조기 신청 마감 등으로 목표한 대출원금 4500억 원의 절반 수준인 220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는 데 그쳤고, 동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제외한 전 부처 R&D 계속과제를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R&D 수행과제에 대한 대출액이 전체의 81%를 차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R&D에 편중된 지원이 이루어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의 심사 소요기간, 사업체의 준비 과정 등을 포함하여 관련 일정을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타 부처 관련 사업의 추진 시 부처 간 협조 및 관리체계를 통해 특정 부처의 연구과제와 관련된 민간기업을 위주로 지원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의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부대의견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타 부처 관련 사업의 추진 시 부처 간 협조 및 관리체계를 통해 특정 부처의 연구과제와 관련된 민간기업을 위주로 지원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고의로, 일부러 일찍 마감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은행 창구 직원들의 책임 문제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협의해서 설득은 했습니다만 일정 기간을 단축시키기가 쉽지 않아서, 최소 3개월 정도가 소요되다 보니까 12월 말까지에서 역산하면 9월 말에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실무적인 애로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위법·부당은 아닌 것 같으니 주의를 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문제가 없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부대의견에 대한 의견은 따로 없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담당 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 제경희 산업융합정책관입니다.

부처 간 다부처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상이 중소·중견기업입니다. 그런데 중소·중견기업 대상 지원하는 사업이 아무래도 산업부하고 중기부에 몰려 있는데 중기부 같은 경우에는 별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에서는 중기부를 제외한 범부처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중소·중견기업 대상 지원은 산업부에 편중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고요. 저희가 전 부처에 지원 과제가 있다라는 홍보는 충분히 노력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부대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뭐냐고요. 부대의견에 대한 의견이요.

○소위원장 장철민 부대의견은 수용하기 어려우시다라는 말씀이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동의하냐는 얘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 제경희 아니, 동의 안 하는……

○오세희 위원 동의 안 한다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 제경희 예.

○소위원장 장철민 부대의견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 제경희 예.

○서일준 위원 열심히 하고 있다 이 말이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부대의견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없애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 제경희 예, 삭제를 해 주셨으면……

○오세희 위원 삭제해 달라는 거예요?

○소위원장 장철민 일단 정부 의견은 그렇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예.

○정동만 위원 이 대출원금이 4500억에서 절반 수준인 2220억이 되었고 예산도 130억 중에 65억밖에 집행이 안 됐다, 그렇지요? 거의 절반이 불용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

고 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 제경희**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해에 1년 동안 기획한 것이 아니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전 수요조사를 뒤늦게 한 3개월에 걸쳐서 하기는 했는데 충분치 않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차보전 사업인데 이게 중기부가 했던 다른 유사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애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사업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금융기관하고 좀 더 이것을 개선하는 방안을 앞으로 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동만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산업부 의견을 보면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홍보활동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안 되니까 참여율이 많이 오르지 않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어제 제가 이 부분도 의견이 있어서 담당한테 계속 물어봤었는데 특별히 다른 부처나 산업부에 해당하는 것만 별도로 차별을 해 가지고 홍보를 했거나 그러지는 않고 동등하게 했더라는 점 하나 말씀 올리고요.

또 하나는 자료를 배포하거나 설명을 해야 하는 데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보낼 수 있는 데다가는 다 보냈다고, 그리고 설명도 좀 하고 그렇게 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최초의 수요 예측이 너무 촉박하게 됐던 것에서 그 원인이 있다는 말씀은 제가 인정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 걸로 잡혀 있으니까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동만 위원** 아무튼 후반기로 갈수록 대출 신청이 더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홍보도 하고 해서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차관님, 조금 전에 9월 말에 대출 기한을 조기 종료했다는데, 아까 실무적인 그런 문제로 했다는데 실무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3개월이나 빨리 종료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통상적으로 봤을 때 시중은행의 창구 직원이 서류를 접수해서 리뷰를 해 가지고 결재를 받고 시행까지 가는 과정이 거의 3개월이 최소 수준으로 걸렸다고 합니다.

○**서일준 위원** 그렇게나 걸려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저도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걸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실제 9개월 동안밖에 못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그래서 저도 ‘너희들이 가서 그 부분 더 줄이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곤란해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창구 직원들 면책조항을 좀 도입을 했으면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 쪽을 아예 제도적으로 패스트 트랙으로 할 수 있게, 그 조항 쪽을 넣을 수 있게 너희들이 좀 해 보라라고 저도 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제도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위원장님, 부대의견이랑 다 똑같이 제도개선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말씀 올린 것처럼 제도개선을 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구자근 위원** 곤란하니까 오세희 위원님 나갔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장철민** 어차피 부대의견의 내용이 사실 제도개선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를 하는 것에 무리는 없어 보이는 합니다. 부대의견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면 부대의견을 살려 놓는 게 맞겠지만 위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완전히 같은 의견이고, 어차피 제도개선에 관련된 사안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자부 차원에서도 관련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으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조금 이석하시기는 했는데 저는 그냥 계속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5번입니다.

바이오헬스 분야 전문인력 양성 확대 및 기존 인프라 활용방안 강구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입니다.

2022년 기준 바이오헬스산업 인력 부족률은 3.5%, 제약바이오기업 인력 부족률은 14.1%로 나타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 인력 부족률이 높은 상황에서 해당 사업에 따라 양성되는 전문인력 규모는 200~250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대전테크노마트 등 기구축된 바이오산업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의견 없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제도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바이오 분야 R&D 사업 지원 대응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바이오산업기술개발(R&D)입니다.

지적사항은 의정갈등에 따른 임상연구 지연으로 다수 과제에서 연구개발기간 연장이 발생했다는 내용과 바이오 분야 R&D 사업 신규과제 협약체결 지연으로 협약 전 연구개발이 시행되는 사례가 발견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 분야 R&D 사업 지연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기한 내에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주의하라는 2건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7번입니다.

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과제중단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R&D)입니다.

지적사항은 의정갈등에 따른 임상연구 지연 등에 따라 연구개발기간 연장 및 과제중단 사례가 발생했다는 내용과 연구자 부정행위, 연구수행기간 내 목표달성 불가능, 수행기간 경영악화 등에 따른 과제중단 사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 분야 R&D 사업 지연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과 R&D 사업 과제기관의 선정, 성과관리 및 과제중단 시의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주의 또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첫 번째 사안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에 주의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좀 부연설명드리면 중단 과제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서 부정행위나 그런 것들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 연구개발기간 연장이나 과제중단을 했던 사안들입니다. 위법·부당한 것까지는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이 그냥……

○소위원장 장철민 저는 제도개선으로 했는데, 지금 어차피 범정부적으로 R&D 정책 전체에 대해서 제도개선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은 참여자 모집전략 재검토 및 이월 처리한 운영비 잔액 국고반납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입니다.

지적사항은 모집기관 선정이 지연되는 한편 참여자 모집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지연이 발생했다는 내용과 2024년 발생한 사업단 운영비 집행잔액을 이월 처리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체적인 모집전략을 재검토하여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주의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또한 산업

통상자원부는 이월 처리한 2024년 운영비 집행잔액을 국고 반납할 것을 지적하는 주의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지적된 사안이 전부 다 아픈 부분이 있어서 의견 없습니다. 주의를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정부가 수용했으므로 주의를 수용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일반연구비 경쟁입찰 확대 필요합니다. 관련 사업은 국제표준화 동지원입니다.

이에 대해 최근 3년간 동 사업에서 일반연구비로 추진한 계약체결 현황을 보면 매년 연구용역 전체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경쟁이 계약의 원칙임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을 지양하고 경쟁입찰 방식을 확대해 나가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0번입니다.

R&D 사업 예산으로 정보화사업 등 추진 지양 필요합니다. 관련 사업은 융복합신기술 제품안전기술지원(R&D)입니다.

이는 내역사업인 제품안전성향상 기반조성으로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 과제는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기획·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연구개발 사업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정보화사업 등을 추진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성격에 맞게 적정 예산과목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하라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1번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사업 사업방식 개선 필요합니다. 관련 사업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생태계조성입니다.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는 보조사업자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사업 예산이 전액 교부되어 수행되고 있는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외부용역 비중이 높고 일부 내역사업의 목적과 관련이 적은 과제를 수행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 사업을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의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주의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도개선을 건의드립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내부에서 모든 걸 다 이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는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내부화할 수 있는 역량을 좀 갖추도록 하고 있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러한 외부용역 비중을 낮추도록 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조사업자를 늘리거나 다른 방식은 없는 건가요? 이게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만 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지금 현재 제품안전관리원이 보조사업자라서 일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과제는 외부의 전문성이 필요해서 간접보조사업으로 과제를 좀 주고 있는데 그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라서 그걸 줄이고 관리원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거의 제도개선으로 동의를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22번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권역별 균형 설치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입니다.

지적사항은 내내역사업인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의 구축현황을 보면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강원권 등에 구축되어 있는데 호남권, 제주 등 일부 지역에는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구축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때 소외지역, 안전체험관 미설치 지역 등을 고려해서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후화로 문을 닫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운영·관리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제도개선 쪽으로 해 주시면 미설치된 지역을 고려하여서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조치토록 하겠

습니다.

○구자근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장철민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차관님, 그렇게 제도개선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게 우리 전문위원들 검토의견에 소외지역이나 안전체험관 미설치 지역에 권역별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권역별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올해 공모했는데 전북이 선정됐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호남권으로 묶을 때, 권역별로 해서 묶을 때 전남이나 광주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지금 하는 것처럼 하게 돼서 우리가 가점을 주는 형태로 하면 광역단체별로 지금 안 된 곳이 경북, 전남, 충남, 대전 이런 권역들이 많은데 제도개선을 권역별로 해 버리면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강원권 이렇게 묶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나머지 진짜 소외된 부분들이 설치해야 할 곳이 안 되니까 그렇게 제도개선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 산자부에서 하고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광역단체별로 해서 좀 더 어려운 곳에, 어린이 안전체험관이 미설치된 곳에 더 설치될 수 있도록,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어떻습니까?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권별로 하면 안 되어 있는 데가……

○소위원장 장철민 국장님, 소속·이름을 밝혀 주셔야 속기록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입니다.

현재 미설치된 데는 호남권, 제주권입니다. 광역권별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것을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또 부족한 데들이 경북, 뭐 이렇게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면 1년에 한 3개라도 하면 조금 더 단시일 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예산이 줄어서, 한 1억 정도 드는데 그게 매년 1건 정도밖에 설치를 못 해서 조금……

○구자근 위원 자, 여기 보십시오. 위원장님, 여기 보니 대전도 안 되어 있네. 위원장님 계시는데 올해 예산 좀 더 올리세요.

(웃음소리)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저희가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부족한 지역이 꽤,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하나씩 늘려 가다 보면, 또 과거 노후화되고 그래서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차관님, 배정 좀 키우라고 하세요. 한 1억 들어가는데 그것 뭐……

저는 제도개선으로 할게요. 이게 인쇄가 잘못되었어요. 제도개선으로 했는데 주의로 되어 있네요.

○소위원장 장철민 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시정으로 되어 있네.

○소위원장 장철민 어쨌든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23번입니다.

연례적 예산 이월 및 집행계획 없는 보조금 교부 관행 방지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유통물류기반조성입니다.

지적사항은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발전기반 조성과 유통산업 실태조사 사업의 연구용역 관련해서 연례적 예산 이월이 반복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집행계획에 대한 검토 없이 보조금 잔액을 전액 교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검토하여 집행계획이 불명확한 보조금은 교부하지 않도록 하고 연구용역의 연례적 이월 관행을 근절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또 밑에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산업정책 방향의 기초가 되는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매출 조사 시에 그 범위를 확대하여 실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사업의 조기 착수 등을 통해서 사업 연장 최소화를 해 나가고 사업 검토를 통해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부토록 제도개선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25년의 연구용역은 과제를 선정하여 진행 중인데 이번에는 연내에 다 종료될 수 있을 것으로, 조치 가능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동만 위원님.

○정동만 위원 위원장님, 작년 결산에도 지적을 받고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연구용역이 연말에 집중되는 이유가 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정책관 박덕열 중견기업정책관입니다.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그다음에 주로 하반기에 저희가 국감도 있고 국감에서 지적사항들도 있으니깐 그것을 반영을 해서 연구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득불 또 연말에 선정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개선을 해서 연말 내에 다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하여튼 잘 살펴보시고 개선되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정책관 박덕열 개선되도록 저희가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저 하나만, 이것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어디지요? 제가 알기로 좀 이상한 기관에서 수행했던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정책관 박덕열 아닙니다. 용역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다 공고를 하고 공고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굉장히 여러 건이 있습니다, 1건이 아니구요.

○**김동아 위원** 그러면 대학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컨설팅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정책관 박덕열**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 주제에 따라서 산업연도 하고요 KDI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주제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정책관 박덕열** 예, 공고 절차에 따라서 공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앞서 유사 항목에서 제도개선으로 정리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이 건도 동일하게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아까 정부가 수용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부대의견은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

○**김동아 위원** 이것 관련해서 잠깐만, 혹시 한국경제인협회에도 연구용역 맡기나요?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정책관 박덕열** 제 기억으로는 없는데요, 확인해 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정책관 박덕열** 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24번, 증액소요 시 사업 내 구조조정 우선 검토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만성적으로 이월·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해당 사업에 대해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 구조조정 없이 예산을 증액시키는 한편 그에 따라 이월·불용액이 전년 대비 4배에 달하는 5억 750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역사업 증액이 필요한 경우 예산을 추가 증액할 것이 아니라 세부사업 내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적정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편성 예산은 적시에 집행하도록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1번,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및 예산 불용 방지 등 사업관리 강화입니다. 관련 사업은 주요기반시설지원입니다.

지적사항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가 보조금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른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제출되었고 내역사업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 예산액은 행정절차 지연

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되어 전액 불용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고 예산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관리를 강화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2번입니다.

사업시행법인 설립 지연 최소화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산업단지환경조성입니다.

산업단지구조고도화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의 경우에 펀드 조성 후 사업시행법인에 지분투자 등의 형태로 최종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구조임에도 24년 선정된 사업 총 7개 중 3개의 사업시행법인이 25년 6월까지도 미설립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시행법인 설립 지연에 따른 사업 효과성 저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3번입니다.

센터건립 등 시설확충 사업의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산업단지환경조성입니다.

산업단지구조고도화 내역사업의 5개 내내역사업인 휴폐업공장리모델링, 노후공장청년친화리뉴얼 사업 등의 경우에 2015년부터 23년까지 지원이 이루어진 151개 사업지 중 33개 사업지에서 당초 계획 대비 추진 지연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내 시설 확충 및 센터 건립과 관련된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대비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에 지방비 매칭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추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신청 시 감점 부여 등 페널티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것 페널티 도입하는 게 괜찮아요?

○**이재관 위원** 페널티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장철민** 페널티 도입을 요구하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혹시 의견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산자부에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페널티 도입 부분 쪽은 바로 도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타당성 부분 쪽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성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특히나 지자체에 바로 감점 부여나 또 예를 들면 감점 부여를 한다는 게 동일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 대한 페널티 부여 방식이 될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사실 절차적으로 산단 구조고도화와 관련된 사업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다른 사업에 감점을 부여하는 게 그 지역에 오히려…… 산업 분야의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또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은 단순한 것 같지는 않아서 저희가 어쨌든 총괄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이라고 하고 이 사안은 산업자원부가 이후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면 이 의견을 준 강승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이 사안은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지자체에 감점 부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약간 과해 보이니까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4번입니다.

사업비 조달 가능성 및 규제 이슈 점검을 통한 사업중단 사례 재발방지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산업단지환경조성입니다.

지적사항은 석유화학산단통합안전체계 구축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울산국가산업단지 통합파이프랙 구축 사업의 경우에 2024년 8월 울산시가 사업중단 의사를 제출함에 따라서 지자체의 보조금 예산현액 50억 30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 중단 등 유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 조달 가능성 및 규제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라는 내용과, 또 국가가 지정한 산업단지의 공용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전액 국비 지원 등의 재원 다각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의견 없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제도개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입니다. 45쪽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예타 중 사업예산 편성 자제 및 신규과제 상하반기 균형 발주 등 사업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소재부품기술개발(R&D)입니다.

지적사항은 예비타당성조사 중 편성된 첨단전략산업초격차 내역사업의 경우에 당초 예산 160억 원 중에 61억 8000만 원에 대해서만 타당성이 인정되면서 98억 2000만 원의 잔여 예산이 발생하였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잔여 예산 등을 활용하여 신규과제 30개를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23년 결산심사에서 경제안보 직결 핵심전략품목에서 중단과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요구하였으나 24년 4개 과제가 중단되어 93억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신규과제 700건 전부를 하반기 집행을 전제로 6개월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잔여 예산을 임의로 활용해서 신규과제를 선정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의 요구가 또한 있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전략과제가 중단되어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제기관 선정 및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의 요구가 있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 등 R&D 사업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신규과제 편성 시 상하반기 협약과제를 적절히 배분해서 집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세 가지 사안 중에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 시정 사안을 주의로 건의드립니다. 저희들이 세부사업 내에서 내역사업 간의 조정은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었던 사안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이 가능하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사전부터 기획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라는 규정상에서 할 수 있었던 사안인 점을 해량해 주셔서 시정을 주의로 변경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 없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규과제 일정을 상하반기로 적정 배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안에 대한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부는 세 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주의, 두 번째 것은 시정에 대해서 수용, 세 번째 사안은 제도개선을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김동아 위원 아까는 예산을 다른 데 써서라도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른 데 썼다고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이재관 위원 잔여 예산을 활용할 때 프로세스를 보통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 프로세스만 제대로 된다면……

○산업통상자원부산업공급망정책관 나성화 산업공급망국장 나성화입니다.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예산이기 때문에 잔액 예산이 남았을 때는 바로 다시 투입을 해서 과제를 다시 계획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예타 잔액같이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예산 당국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고요. 협의하고 난 다음에 산업부에 사업심의위원회를 따로 개최를 해서 그 절차를 준수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있는 절차들을 다 지켜서 시행을 한 내용입니다.

○김동아 위원 처음 것을 제도개선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재관 위원 이것을 막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그러면 지금 내역사업 간의 변경에 관해서 말하자면 특별히 제한된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부처 재량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산업공급망정책관 나성화 예. 지금 예산편성지침상에 따르면 예산편성지침에는 ‘예타 중인 사업도 차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대로 저희가 반영한 것이고.

그런데 그다음 연도에 실제로 예타 통과한 금액이 애당초 정부안에 들어갔던 금액이랑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발생한 잔액은 다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내역사업 간 조정을 할 수가 있고 그 조정을 할 때는 예산 당국하고 사전 협의하고 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신규과제를 디자인해서 다시 투입하도록 하는 프로그램형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 자체는 저희가 다 준수한 형태입니다.

○구자근 위원 예타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들은 불용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공급망정책관 나성화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예타 결과를 미리 다 예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가 그 사업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 예타는 진행 중에 있으면서 정부 예산 프로세스는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반영을 시키고 다음 연도에는 예산이 확정되는, 그러니까 예타가 확정되는, 이 예타 절차하고 정부 예산 절차하고의 간극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구자근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30개 신규과제 선정한 것이 과하다 또 전체 금액이 예를 들어 한 1700억 정도 되는데 그게 과하다는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산업공급망정책관 나성화 30개 과제라고 되어 있지만……

○구자근 위원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 정말 국가에서도 꼭 필요한 것들이었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자리에서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공급망정책관 나성화 약간만 배경 설명을 드리면……

○구자근 위원 짧게.

○산업통상자원부산업공급망정책관 나성화 예. 2023년 4월 달에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바로 두 달 뒤에 예타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차전지 분야가 워낙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중요했기 때문에 예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예타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정부안에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나중에 확정되고 났을 때는 98억 정도의 잔여 예산이 남는 바람에 30개 과제는 아니고 15개 과제를 저희가 기획을 했고요. 다른 부분에서 생긴 잔액이 또 60억 원 정도가 있어서 그걸 합쳐서 15개 추가하는 바람에 30개 과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타가 갑자기 이렇게 금액 차이가 크게 되는 이런 상황은 늘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좀 예외적이었던 것 같고 또 잔액 자체가 작은 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주의해서 저희가 예타 과정하고 예산 반영 절차에 간극이 안 생기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서일준 위원님.

○서일준 위원 저는 ‘예타조사 중인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타가 지방소멸 제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을 예타가 통과된 사업만 예산에 타라라고 한다면 할 것도 없어요. 지방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구는 빼고, 나머지 잔여 예산 이 부분은 적당한 문구가 맞는 것 같고요. 어차피 예타 중인 것도 예산에 타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동의하신다는 게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이 문구를 제외하는 것을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뒤에, 첫 번째 항목 자체가 사실 내용이 2개여서요.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고 잔여 예산 임의 변경 관련된, 신규과제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예비타당성조사 관련된 이 문구를 제외해도 뒤에 내용이 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제도개선으로 하자라는 이야기도 하셨고 정부에서는 주의 정도로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주셨었는데 지금 위원님들 의견은 대체로……

○김동아 위원 제도개선으로.

○소위원장 장철민 제도개선이신가요?

그런데 솔직히 제 의견을 조금 한마디 드리면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 내역사업 간 내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 저희가 사실 예산 심사하다 보면 이게 같은 프로그램일 뿐이지 내역사업 간에 ‘이게 어떻게 같은 내역사업이지?’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물론 국회 예산심사를 하면서 프로그램 내 내역사업 간의 차이에 대해서도 일부 심의를 하기는 하지만 내역사업 간 이동이 굉장히 뭔가 자유롭다거나 한쪽 내역사업에 불용이든, 그게 사유가 예타든 다른 사유건 간에 없어졌을 때 다른 내역사업에서 이것을 신규로 사용하는 게 뭔가 큰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나 일종의 국회 권한 침해 사유가 될 수도 있어서 저는 사실은 내역사업 간 이동은 조금 잘 봐야 된다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도 더 주의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저는 첫 번째 내용에서 예비타당성 문구를 제외하고 잔여 예산의 임의 신규과제 선정에 대해서는 주의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첫 번째 것은 예비타당성 이 문구는 제외하고 신규 선정에 대해서는 주의토록 하고, 두 번째는 시정, 세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사업구조 개편 시 성과지표 설정 반영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산업맞춤형전문기술인력양성입니다.

지적사항은 특화단지재직자교육 내역사업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음에도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내역사업 성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재직자맞춤형기술교육 내역사업의 경우에 매년 목표 대비 실적이 초과 달성되고 있음에도 일부 예산 조정을 이유로 과거 3년간 추세치 및 전년도 성과치 대비 하향된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성과지표 선정 시 사업구조 개편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취지에 따라 성과목표를 적극적으로 설정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의견 없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제도개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1차관님 끝나셔서……

그러면 2차관 소관 심사하기 전에 10분간 정회했다가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장철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1차관 소관 심사를 하다가 일부 약간 헛갈린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43페이지인데요. 아까 산업단지구조고도화 관련해서 ‘지자체에 대해서 감점 부여하는 등 패널티 도입을 검토할 것’ 이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발언한 취지는 이게 지자체, 특히나 다른 사업에 대한 감점 부여가 내용적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이것은 삭제하고 강승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약간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셨던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관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가 하여튼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양당이 다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쟁점사항에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만 하고 또 주의, 시정이나 이런 부분만 우리가 토론을 하고 그냥 단순한 제도개선 이런 건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해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지금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원래 오전부터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오후에 회의가 잡히는 바람에 제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라는…… 그렇게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페이지 28쪽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번, 이차보전금의 연례적 불용에 따른 재발방지 주의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에너지 절약시설설치(용자)입니다.

2024년 에너지절약시설설치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 예산으로 25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실제 이차보전 수요가 미비함에 따라 22년, 23년에 이어서 3년 연속으로 전액 불용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유사한 이차보전 사업을 적정 보전금리의 산정 및 사업 수요의 확보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고 예산을 반복적으로 전액 불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주의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가 주의를 수용하는 의견을 썼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주의로 요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쪽입니다.

고효율 설비군에 대한 예산 우선 배분 방안 검토 필요합니다. 관련 사업은 에너지절약 시설설치(용자)입니다.

동 사업의 자금투자 1억 원당 에너지 절감량은 최근 5개년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이는 24년 용자지원 건수의 대부분이 절감 효율이 낮은 소규모 사업 위주로 분산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규모 설비에 대한 분산 지원 위주로 수행되고 있는 현행 사업방식을 고효율 설비군에 대해 일정 비중 이상의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부대의견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사업 설계에 있어서 효율 중심이 아닌 수요 대응 중심으로 예산이 배분되어 온 사업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거 사실상 같은 내용인데 시정요구랑 부대의견을 이렇게 나눠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같은 내용으로 보이는데.

○김동아 위원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어쨌든 정부도 수용했기 때문에 시정요구는 제도개선 그리고 부대의견도 이 문구대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국회 예산 심의·의결 취지가 훼손되는 예산집행 지양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에너지바우처입니다.

2023년 동절기바우처 단가 인상에 따라 24년 상반기 사업비를 과다 편성하였고 24년 상반기부터 과다편성분 1103억 4500만 원을 등유·LPG, 하절기바우처, 연탄쿠폰으로 조정 집행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취지를 존중하지 않은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의 심의·의결 취지를 벗어나 당초 예산에 없던 사업을 내역사업 간 조정을 통해 임의로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기한 사항을 준수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을 시행하고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예산 불용 및 과다한 내역사업 간 조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주의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부대의견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주의로 시정요구사항은……

○오세희 위원 제도개선으로 하지요.

○서일준 위원 오세희 위원님이 제도개선 하자고 지금 다시 제안했어요.

○소위원장 장철민 그런데 앞에 1차관 소관 할 때 물론 내용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내역사업 간 이동한 것에 대해서 주의로 정리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일관성을 위해서는, 또 정부도 수용했고 주의로 정리하는 게 타당할 것 같기는 합니다.

○오세희 위원 예.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주의로 시정요구사항 정리하고 부대의견은 이 문구대로 수용하도록 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입니다.

바우처 사용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에너지바우처입니다.

동절기바우처 사업의 경우에 과다 편성된 사업비 1103억 4500만 원을 타 내역사업으로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4901억 7600만 원 중 3904억 9700만 원이 집행·교부되고 996억 7900만 원이 불용되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바우처의 실사용률이 지원 단가 대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저소득층일수록 바우처 사용률이 저조한 사각지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자·우편발송보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등 바우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의 주의 요구가 있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비를 과다 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원 대상, 지역, 주택구조, 난방 수단 등 다양한 요인별로 바우처 사용 실태를 분석하여 인지도 제고, 신청절차 간소화, 비정형가구의 보완장치 마련 등 사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모두 주의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동아 위원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서일준 위원 수용한다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사실 의무지출형 사업이라 그 대상자가 요건만 되면 바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예비율을 갖추고 있어서 당초보다 예산이 지급이 안 되는 불용이 좀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예측을 좀 더 정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박상웅 위원 질문이 있는데요, 짧게 할게요.

생계급여 대상자들은 기준이 중위소득의 32% 이하라 정말 저소득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박상웅 위원 이분들의 혜택이 생각보다 낮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의 에너지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계량기가 자기 이름으로 돼 있으면 어떤 접근하고 요청하고 하는 절차도 쉬울 텐데 가난한 저소득층은 주택도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계량기도 타인 명의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직접 청구하기가, 신청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도 있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 취지가 사실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목은 그런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것까지 좀 고려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저소득층이 직접 신청을 못 해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권으로 대리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박상웅 위원 그러니까 실거주자와 계량기 소유자 명의가 달라도 이 사람이 실거주자라는 것만 확인되면 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특단의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것도 저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검토가 아니라 진짜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이거 할 필요가 없어.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알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런데 지금 계량기 명의자한테 지급되는 건가요? 그게 아닐 것 같은데……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계량기 명의는 사실은 주택 소유자가 갖고 있고요. 일반 주택에 쓰는 계량기들을 주택 소유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런데 바우처는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소득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러니까 계량기 명의자와……

○박상웅 위원 달라요. 다른 경우가 많아요.

○박지혜 위원 그러니까 다른데, 계량기 명의자를 기준으로 바우처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박상웅 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박지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니냐, 저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니냐.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걸 계량기 기준해서 하고 있고요.

○박지혜 위원 아, 계량기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박지혜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박상웅 위원 그래서 계량기 소유자로 가니까 그 임차인들이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걸 제도 보완하시라고.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어차피 저희가 예산할 때 또 다시 많이 논의할 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또 정부가 주의를 수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요구는 3건 다 주의로 정리하도록 하고 이후에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연번 5번입니다.

블루암모니아 생산·도입 시범사업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합니다. 관련 사

업은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생산및도입기반구축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블루암모니아 생산·도입 시범사업은 천연가스 가격 변동, 글로벌 청정수소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해외 주요기업의 투자 지연 등으로 2년 연속 예산집행 실적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블루암모니아 생산·도입 시범사업의 연도별·단계별 추진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으로 재조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는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시정을 주의로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당초 말레이시아라든가 UAE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사업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났습니다만 최근에 오만이라든지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 협의를 하고 있어서 금년 중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서일준 위원 차관님이 보니까 너무하시네, 부당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제도개선이 맞을 것 같은데 이걸 주의로 수용한다니까…… 이게 부당은 아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제도개선으로 수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소위원장 장철민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정동만 위원 차관님, 국내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국내 수요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동만 위원 예.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국내는 현재 남부발전에서 그런…… 석탄발전에다가 수소를 혼소하는 그런 입찰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 입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러니까 국내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저희가 연간 33만t 정도 수요가 예상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청정수소 입찰시장 올해 또 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작년처럼 입찰시장이 계속되면 한 30만t에서 50만t 또 추가 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런데 보령의 블루수소 생산할 때 25만t 연간 생산하다가 지금 50%밖에 생산 안 하잖아요. 그만큼 국내 수요가 적다는 거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원래 수소를 현재로서는 수송용만 쓰고 있어서 수송용을 근본적으로 수요를 늘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소 수요를 근본적으로 늘리기 위해, 발전용으로 쓰는 것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수송용 이외에 발전용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청정수소 입찰시장을 통해서 발전용 수요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이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들이 적으신데, 서일준 위원님이 제도개선 정도로 정리하자고 의견 주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은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그린암모니아 생산·도입의 신속한 추진 및 국내 수요 확보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생산및도입기반구축사업입니다.

그린암모니아 생산·도입 시범사업은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정부 측에서 제시하는 전력 판매단가 인상으로 말레이시아 프로젝트에 출자 예정이었던 35억 원이 집행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말레이시아 사라왁 프로젝트 협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그린암모니아 생산·도입 시범사업으로 생산·도입할 물량의 국내 수요 확보 가능성 등을 파악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재고하라는 시정 또는 주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시정을 주의로 요청드립니다. 현재 말런 그린수소 프로젝트는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삼성E&A, 석유공사가 사라왁 주정부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앞의 사안은 제도개선으로 하고 이거는 주의로 하면 좀 어색한 거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저는 사실 5번 항목과 6번 항목이 구분돼 있는 것도 약간 이상하긴 한데……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제도개선 동의합니다.

○김동아 위원 그런데 수요 문제가 이게 해결이 되나요, 다 댔을 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현재 사라왁 주정부에서 하고 있는 물량들은 한 30만 t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국내 청정수소 입찰시장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국내 수요가 그 정도 받쳐줄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러니까 지금 석탄발전에서 당분간 석탄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가 수소 발전량들을 전기본에서 물량들을 배분을 하고 있는데 그 물량들이 아직 상당 부분 남아 있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니까 이 수요가 어쨌든 발전에 들어가는 정책적 수요라 산자부에서 컨트롤하는 수요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없을 것 같고, 이 앞의 항목과의 일관성을 위해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7번입니다.

지방비 집행 지연에 따른 사업 차질 방지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수소터빈시험연구

센터구축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방비 집행 지연으로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 구축 일정 차질 및 운영 개시 지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서일준 위원** 수석님, 제도개선으로 돼 있는 거는 패스하기로 했어요.

○**권향엽 위원** 읽기는 해야지, 읽기는.

○**박상웅 위원** 제목 말고 그거 다 읽으면 우리 못 가, 아무도.

○**소위원장 장철민** 그래도 절차상 당연히 보고하고, 빨리빨리는 하지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빠르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제가 조금 더 빨리 읽겠습니다.

(웃음소리)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지방비 집행이 지연되어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 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은 국회 예산심의 취지를 반영한 집행 및 한국석유공사 관리·감독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유전개발사업출자입니다.

지적사항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 사업 추진을 위해서 내내역사업 조정을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와 달리 집행하였다는 내용과, 한국석유공사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의사결정 근거, 집행 절차·내용의 불투명성, 경제성 부족 등 다수의 의혹과 지적이 제기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유전개발사업 출자의 예산편성액을 국회의 예산심의 취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내역사업 변경을 지양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및 유망성 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고,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및 집행 내용 적정성을 국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 공개를 통해 유전개발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주의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의견 수용합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도 주의 수용합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 의견을 주의로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다만 문구 수정을 ‘산업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보 공개, 소통 부족 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자원 개발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문구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권향엽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이 달려 있

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방안이 마련이 되면 반드시 국회에 보고를 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문구는 안 들어가도 괜찮겠다는 의견입니다.

○권향엽 위원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많고 비공개 열람이라도 좀 자료를 사전에 보여 주셨거나 그랬다면 이런 정도의 상황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사후에도 대단히 문제가 더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유망성 구조 결과 발표가 있었습시다만 그 이후에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때 당시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몇 번 지적을 했었던 그 사람을 부사장으로 임명을 하는 등의 계속적인, 내부의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시정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거 감사 청구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지금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권향엽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시정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하는 거는 좋다, 동의해요. 실패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정보를 공개를 해야지.

○박상웅 위원 한다면.

○소위원장 장철민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나 국정감사에서나 충분히 많이 또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니까요 오늘은 결산 시정요구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안은 시정, 세 번째 사안은 주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출자율 관리 강화 및 세부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역사업 추진 지양 필요합니다. 관련 사업은 유전개발사업출자입니다.

지적사항은, 한국석유공사는 매년 예산편성 시 설정된 유전개발사업의 정부 출자율을 준수하지 않고 편성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고 있다는 지적과, 유전개발사업 출자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석유생산시설재활용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은 석유자원 탐사 및 개발을 지원하려는 세부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유전개발사업을 위한 출자금출을 출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소 소요만 반영하고 한국석유공사가 예산편성 시 설정된 정부 출자율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의 요구하는 내용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세부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내역사업으로 편성 및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첫 번째 지적 의견에서는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변경 요청드립니다. 석유공사 투자비에 대한 내부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투자비 산출 적

정성 심의를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집행 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견도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박지혜 위원 질문이 있는데 석유생산시설재활용 친환경에너지 사업, 이 사업은 왜 이 항목을 이용해서 진행한 건가요?

○소위원장 장철민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자원안보정책과장 권덕중 권덕중 자원안보정책과장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저희 동해-1, 동해-2 가스전 사업이 유전개발사업 출자예산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고 친환경시설지원 예산 사업은 이미 정부가 출자해서 구축된 플랫폼을 재 활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연속선상에서 지난 2년간 사업을 지원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해부터는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런데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부유식 해상풍력을 한다는 것은, 저도 그 사업 내용은 계속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의아해서 여쭙본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2년간 그렇게 지원을 해서 진행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면 새로 편성해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자원안보정책과장 권덕중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더 이상이 예산 비목으로 지원하지 않고 지금 현재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일단은 하고 있고 향후 계획에 따라서는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신규 예산으로 지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동안 지원한 부분이 헛되게 되지 않도록 이것은 좀 방안을 마련해서 제대로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시설물이 사실 우리나라에 여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부유식 해상풍력은 반딧불이라고 해서 울산 지역만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는 하나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시설은 별도 편성을, 저희가 사업을 기획해서 이것을 활용하면서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 단지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더 있으십니까?

그러면 두 항목 다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10번입니다.

국회 예산심의 취지를 반영한 집행 및 집행률 제고방안 모색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와 달리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의 예산편성액 전액을 국내외 유전개발을 위한 민간융자금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집행하였다는 지적이 있었고,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은 2017년 이후에 연례적으로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의 예산편성액을 국회의 예산심의 취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의 또는 제도개선의 요구가 있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융자 수요에 대한 예측을 보다 강화하여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첫 번째 지적 의견은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변경 요청드립니다. 올해 수요 발굴해서 국회 심의에 맞게, 이 취지에 맞게 예산집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 의견은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1번입니다.

국제공동연구 개발과제의 집행 부진 재발방지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에너지국제공동연구(R&D)입니다.

지적사항으로 2024년 추진한 과제 중 11개 과제는 연구수행기관에서의 최종 집행률이 2024년 말 기준 30% 미만으로 저조한 수준을 보였는데 해외 정부와의 공동연구 추진 협의, 수행기간 협의 등의 사유로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 정부와의 협의 지연 등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의 집행 부진과 관련해서 조기 공고를 도입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12번입니다.

국고보조금 재이월의 제한적 허용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수소생산기지 구축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전해 공급인프라 구축 내역사업 및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내역사업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규정된 재이월 사유를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2차 보조사업자의 재이월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규정된 재이월 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재이월을 지양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3번입니다.

수소생산기지 구축 지연 최소화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수소생산기지 구축입니다.

수소생산기지 5개소의 구축이 모두 지연 중인 상황으로 24년도 예산현액에 대한 보조

사업자의 실집행률은 16%로 부진한 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생산기지 구축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산집행 지연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며 연차별 보조금 규모를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제도개선 괜찮으시지요?

○정동만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5개 사업 전부 다 지연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사업기간이 몇 년이지요? 3년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정동만 위원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아마 수전해 스택이 핵심 설비인데 수전해 스택을 발주해서 들고 오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올해 초에 마무리가 돼서 금년 내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5개 지역 모두 수전해 스택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서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린 겁니다.

○정동만 위원 이번에 다 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은 자료 47페이지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입니다.

연번 1번, 출연금 편성의 타당성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의 적정성 검토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포항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재정법 제12조는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요하고 있으나 지진안전관리센터 구축 사업을 위해서 출연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출연금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진안전관리센터 구축 사업 수행과 관련해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전문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업을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적정 예산과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수행 역량이 부족한 사업수행기관의 선정으로 당초 계획한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수행기관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은 수용합니다. 다만 제도개선과 관련된 문구를 약간 조정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시정요구사항에 ‘적정 예산과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마지막 문구는 삭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업을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원활

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문구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전문기관과 수행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관련법에 의해서 출연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해당 사업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 의견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아닌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의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을 선정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동아 위원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이 지금 포항 지열발전 안전관리사업과 무슨 관계가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에서는 지진 안전과 관련된 홍보, 인식 제고라는 관련된 사업들이 전체 사업의 맥락에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능들을 산업기술문화재단이 역할 분담하는 쪽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지진안전관리센터 구축에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이 방송 업종인데 들어가서 하는 게 타당하다는 말씀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일정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지진 안전 관련된 인식 제고라든가 홍보, 영상 제작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콘텐츠 제작하는 것도 상당 부분 기술문화재단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런 역할들을 부여했었습니다.

○김동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두 번째 사항은 삭제하도록 하고 첫 번째 사항 중에 적정 예산과목 변경 부분 문구 삭제하는 것도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지원 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전력효율향상입니다.

지적사항은, 내내역사업인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이 1등급의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구매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사업 성과가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효율 가전 구입 지원과 관련하여 적절한 유인 제공 여부, 현재 취약계층 소득수준 대비 지원비율 및 한도의 적정성, 보조금 신청 용이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사업수행체계 다변화, 홍보 강화 등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의 요구가 있었고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수혜자의 보조금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사업 목적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인 만큼 출산가구, 대가족, 3자녀 이상 대상 지원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첫 번째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주의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제도개선 의견을 주셨습시다만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출산가구, 다자녀 등을 별도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행정하는 데 비효율이나 혼선 발생 우려가 있어서 현재와 같이 동 사업 내에서 같이 지원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오세희 위원 지금 이게 280억의 예산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오세희 위원 그것 이월금 빼면 197억,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오세희 위원 그러니까 28억이 불용됐는데 이게 왜 불용됐냐면 지금 1등급하고 일반의 가격 차이가 크잖아요, 구입하는 데 금액이. 지금 30만 원이거든요, 지원이. 그러면 그것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가는 거지. 냉장고 이런 것 살 때 30만 원 줘 가지고…… 그게 지원비용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폭을 늘려야 되지 않나, 1인당 30만 원이라는 지원이.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사실 지원비율을 작년까지는 20%로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이것을 30%로 더 늘리고 한도도 조금 늘렸습니다. 다만 예산이 풍부하면 저희가 지원비율이라든지 한도를 상당히 높일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예산적인 문제도 좀 고려해서 당분간 30%를 올해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다음번에 한 번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이것 몇 %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

○박상웅 위원 아니, 30만 원이 한도액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오세희 위원 이게 너무 적다는 거지, 가전제품이 얼마인데.

○박상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1등급 가전제품, 냉장고 같은 경우는 몇백만 원 하는데 3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면 취약계층들이……

○오세희 위원 그렇지, 너무 적어요.

○박상웅 위원 그것 기대를 걸고 구매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중산층들 같으면 가능한데 목적 자체가, 아까 전기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이것도 똑같아, 취지는. 그런데 가난한 취약계층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데 아무 도움도 별로 안 되는 그 돈을, 300만 원짜리 1등급 사라 그러고 30만 원 주면 270만 원을 동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실사가 안 되는 거지. 그것 한 번 더 보완을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산 당국과 협의는 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리고 사실은 270만 원을 내고 30만 원을 모아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처음에 전액 다 부담해서 산 다음에 환급받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취약계층 대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취약계층들이 혜택을 입는 제도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 사실은 출산가구, 대가족, 세 자녀 이상, 이 카테고리가 훨

썬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에 맞게 명칭을 붙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전력효율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지난 추경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이 사업의 실질에 맞게, 실질에 맞는 카테고리에 가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써야 한다 그런 취지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개선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197억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박지혜 위원 내수 진작 사업 같아요.

○오세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한번……

○소위원장 장철민 오세희 위원님, 마이크를 켜 주십시오.

○오세희 위원 이것을 조금 다른 콘셉트로 해야 되지 않을까. 197억 가지고 취약계층의 그 많은 수요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금액을 30만 원 주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 사업은 효율 개선 사업입니다. 다만 효율 개선을 하는데 저소득층이 1등급 제품을 쓸 때 인센티브를 좀 줘서 효율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 환급해서…… 이것은 경기 진작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합시다만 사실은 경기 진작의 목적을 갖고 효율 개선 사업을 하는 것은 약간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도개선이나 의견을 주신 대로 저희가 주의 수용하고 앞으로 효율 개선 사업 취지에 맞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박지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제도개선과 관련된 것들은 별도로 구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번까지는 저희가 당분간 유지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 사업과 에너지복지 사업은 바우처라든지 이쪽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분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실제로 이번 추경 때야 약간의 내수 진작 목적이 굉장히 많이 가미돼서 취약계층만이 아니고 전 국민 대상으로 하기는 했지만 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목적상, 저희가 사실 이것 복지에 쓰려고 조성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 주신 대로 대가족, 3자녀 이쪽 위주로 하려면 사실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만들어 가는 게 훨씬 더 적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 건은 정부 의견대로 첫 번째 사안만……

아까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 주의 수용하셨었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소위원장 장철민 첫 번째 사안 주의로 하고 두 번째는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3번입니다.

냉장고 문닫기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 검토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전력효율향상입니다.

지적사항은, 식품매장 냉장고 문닫기 사업은 24년 예산이 150억 원으로 확대 편성되었으나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액이 110억 원으로 조정·교부되었고 이 중 36억 원만이

실집행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요 부족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사업 지속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시장조사나 면밀한 사업기획 없이 성급히 추진하여 예산의 불용 및 재정 비효율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주의 의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주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 규모 확대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동 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 규모는 1682억 1200만 원으로 20년 예산 3475억 6800만 원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5번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 규모 확대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입니다.

이에 대해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동 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 규모는 4263억 원으로 21년 예산 5340억 원 대비 약 1000억 원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융자액의 이월 최소화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설치에 필요한 자금 지원인 ‘생산 및 시설자금’과 관련해서 총융자액 중 153억 800만 원이 이월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시설 관련 융자 지원의 재정투입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집행단계에서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하라는 제도개선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센터 적기 구축을 위한 사업관리 및 감독 강화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해상풍력산업지원입니다.

2024년 해상풍력지원센터 구축 과정에서 연중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25년 4월에서야 착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4년도 사업비 60억 원 전액을 한국에너지공단에 교부하였고 이 중 15억 3200만 원이 25년도로 이월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연약지반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에는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여 센터 구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관계기관의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 점검 및 사업관리 철저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구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지자체의 사업 지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24년도 사업비 32억 원을 지자체에 전액 교부하였고 25년 6월 기준 총국비 62억 7000만 원 중 실집행액이 2억 4000만 원에 불과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경남 종합지원센터가 계획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잔여기간 동안 사업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관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집행 적정성 확보 및 제도개선 필요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 또 특별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무조정실 전력기금 점검 결과에 따른 지원금 환수, 발전소 폐지 등으로 인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024년 계획현액 1276억 3000만 원 중에 24억 1700만 원이 불용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조정실 조사 대상 기간 이후의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결산 재검증 등을 통해 부적정 집행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특별지원사업의 연례적 실집행을 저조 원인을 분석하여 사업 절차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의 시

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국무조정실 조사 대상 기간이 17~20년인데요 이 외에 2021년 결산 때부터도 매년 집행 재검증을 철저히 해서 부적정 집행을 차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오세희 위원님.

○오세희 위원 지금 허위결산, 중요재산 관리 소홀 또 부적정 집행, 이게 283건이거든요. 발전소를 유치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것 어떻게 관리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현재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단을 별도로 꾸려서 현장실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아마 2년 전에는 국무조정실에서 일괄 감사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일체 발굴조사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부터는 기금관리단에 상시점검단을 구축해서 매번 회계검사, 실제 현장검사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위원님들, 제도개선으로 하는 걸로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입니다.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의 계약 투명성 제고 및 불용 방지 대책 마련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농어촌전기공급입니다.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위탁계약 관리 부실 등으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고 연료비 과소편성 등에 따른 계약과 집행의 불일치로 불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내용과, 한전은 도서전력설비 운영을 퇴직자단체 자회사에 위탁하며 반복적으로 소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국가계약법 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과다 요청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소급계약 및 퇴직자단체와의 장기간 수의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기준연료비 산정 시 합리적인 단가를 반영하고 과소편성 및 연말 자체 변경 관행을 개선해서 불용의 재발을 방지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주의 의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정부가 주의 수용했기 때문에 주의로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연구비 관리 강화 및 인력 확보를 통한 적기 집행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입니다.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 사업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내 연구비 집행내역 등록 지연으로 집행상황 파악이 어렵고 24년 예산 삭감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신규인력 채용계획 연기로 인건비가 이월되는 등 과제 수행에 차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비를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신규인력 미확보로 인건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하며 실집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2건 모두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런데 이게 2건인가요? 사안은 하나인데 안에 내용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서 제도개선 요구는 하나로……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하나입니다. 1건으로 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자금 사용의 적정성 확보 및 사후점검 강화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은 일부 지원대상 기업이 단기적인 경영난 해소나 기존 대출금 대환을 위해서 자금을 사용해서 원전 생태계 활성화라는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동시에 지원받은 기업들이 자금을 그 성격에 맞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사후점검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원대상 기업의 용자금 사용 용도가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동시에 지원받은 기업들이 각 자금을 성격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첫 번째, 용자금 사용 용도가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부분은 현재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서 지원대상 자금 용도를 충족하게,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라든가 금융지원에서도 대출금 대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도개선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에서 이야기한 대로 앞부분의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부분은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하고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은 보증발급 실적에 연동한 출연금 집행 관리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원전수출보증입니다.

원전수출보증 사업은 2024년 원전수출계약 및 보증서 발급수요가 전혀 없어서 보증실적 또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50억 원의 출연금이 편성·집행되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자본금으로 회계처리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증발급 실적에 연동한 단계적인 자금교부 등 금융성기금 출연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60쪽,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의 성과관리 및 교육체계 내실화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사용후핵연료관리기반조성입니다.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은 대학지원, 연합대학, 종사자 마스터 양성, 글로벌 인력양성 등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교육 품질 편차와 성과관리 한계, 현장적합성 부족 등으로 사업 취지 달성에 미흡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교육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성과관리체계 마련, 참여 대상 적정성 확보, 교육방식 개선 등 실행 가능한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내실 있는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도개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본경비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합리성 제고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본경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폐물 처분시설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위해 매년 기본경비 사업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은 2019년 이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정요구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본경비 사업에 대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기금운용계획의 합리성을 제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마지막입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비중 축소 및 운용 효율성 제고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입니다.

지적사항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서 기금의 법적 취지와 수익성 제고 측면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원자력 사후관리체계 구축과 안전관리의 목적상 전입·전출 제외 대상 기금임에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높은 비율로 예탁하는 것은 법적인 취지와 상충된다는 지적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아닌 연기금투자펀드 등 대체 운용 시 약 2000억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를 증가시킨 현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예탁 규모를 축소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런데 이걸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동아 위원 이게 되나요? 이 제도가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현재 방폐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하지 않고 공자기금에 위탁하지 않을 경우는 한 2~3%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 기재부 예산 당국이 전체적으로 공자 규모 자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협조를 요청하는 건데, 예탁하는 것은 제도상으로 규정상 문제는 없습니다만 수익이 일정 정도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걸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사항 중에 추가적으로 의견 주시거나 하실 내용들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래는 저희가 자료 정리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면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정리가 다 돼 있어서 정회 없이 1차관님 들어오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정리한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024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 시정요구 결과입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시정이 3건 있었고 주의 13건, 제도개선 59건 해서 총 75건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3건의 부대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부대의견이나 다른 사항에 대한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실 시간도 물리적으로 없으셨을 것 같아서 약간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정리된 자료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신학 제1차관, 이호현 제2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들 일찍 끝나시기를 바라서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중소기업부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들어오셔서 정리되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히신 후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첫 번째 사항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배부해 드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소위원회 심사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 총괄입니다.

2024년까지 종료된 R&D 과제 중에 정산금 미납 과제가 753건,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처분에 따른 환수결정액 징수율이 53.6%, 제재부가금 징수율이 10.4%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산금 회수를 위한 대책 및 책임 있는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주의 요구해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제도개선으로 완화 요청드립니다. 이유는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단계별 세부관리 방안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제도개선 동의하시는 겁니까?

○정동만 위원 예.

○소위원장 장철민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기부가 이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2쪽입니다. 이어서 R&D 총괄입니다. 그러나 R&D 총괄을 다 포괄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세부 사업들은 저희가 3페이지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2024년 R&D 예산 감액으로 중기부 소관 총 20개 사업의 2477개 과제 중에 2308개 과제가 당초 협약과 달리 변액·감액되었고 152개 과제가 중단되어서 성과 달성이 어려워지고 손실이 발생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R&D 예산 감액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집행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부대의견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손실 등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점검하고 관련 지원을 반드시 병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완화 요청드립니다. 이유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업계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감액 수용 기업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 지원을 시행한 바 있고 중단 희망 기업 대상으로는 제재처분 면책 시행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유·무형 피해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는 수용하지만 관련 지원 같은 경우는 이미 95%가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한다는 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감안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동아 위원 아니, 지금 피해 지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산집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재발방지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R&D 예산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이 접근을 했고 끝……

○김동아 위원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는 주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런데 내용적인 변화는 없고 주의와 제도개선의 수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정동만 위원 위원장님, 부대의견에 단순히 이렇게 삭감된 부분뿐만 아니고 그 전에 R&D 예산에 대해서 증액하면서 그 기준과 원칙이 뭔지 그리고 또 불필요하게 증액된 부분은 없는지 함께 점검하도록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저희가 그러면 감액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동만 위원 예.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특히 부대의견 뒤쪽 병행 방안 마련 시행에 대해서는 중기부에서 일부 조금 설명을 했는데 오세희 위원님께서서는 뒷부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오세희 위원 예. 지금 95%가 중단됐다고 하니까…… R&D라는 게 한 5년 동안 연구가 되는데 이렇게 그냥 바뀔 때마다 스톱되고 또 시작하고 기업이 손실을, 152개 과제가 중단된 안타까운 일이에요.

○소위원장 장철민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일단은 앞에 시정요구는 주의로 하고 뒤에 부대의견 부분은 뒷부분 삭제하고

‘점검하고’까지만 내용을 남기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동의하셨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입니다.

세부유형 중 하나인 대·중소상생형 구축사업은 디지털 역량이 취약한 중소 제조기업의 기초단계 수요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도화 단계 구축사업에만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사업에서 진행 차질이 발생하고 대기업 협력투자가 저조하게 됐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시정요구는, 중소벤처기업부는 DX 고도화 정책을 추진하되 기초단계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수요에 균형 있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직접지원 확대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수용하겠습니다. 현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수준의 스마트공장 지원 체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5쪽입니다. 계속해서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데 사업예산 일부를 추진단 운영비로 집행하고 있고 또 사업출연금을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구매 등 용도로 집행했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이에 시정요구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출연사업 운영비를 별도 내역으로 편성하여 추진단의 적정 운영비 규모에 대해 예산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예산집행 시에 당초 편성된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고 법령에서 정한 예산과목의 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으로 시정 또는 주의 의견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완화 부탁드립니다. 통상적으로 부처 승인하에 일부를, 사업 운영비를 사업비 내에 편성해 온 관행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운영비 별도 내역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향후 주의하고 사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대체로 정부 의견에 동의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주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위원장님,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부처 승인하에서 관행으로 했다고 했는데 운영비를 별도 해서 국회 승인받아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6쪽입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사업입니다.

민간투자연계(스케일업 팁스)는 신규 지원기업 선정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된 문제가 있으며 운영사들이 배정된 추천권을 소진하지 못하거나 과소 배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시정요구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운영사 컨소시엄의 투자발굴 기능 강화와 R&D 협약 지연 방지를 위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 의견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7쪽입니다.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입니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정산이 지연돼서 일부 공급기업은 서비스 제공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대금을 정산받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시정요구는, 중소벤처기업부는 바우처 사용기업과 공급기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정산시점 분산을 유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수용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 공고시점을 앞당기는 등 일부 개선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8쪽입니다. 장애인기업 육성입니다.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경제인에게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지만 2024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증장애경제인에게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의 의견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수용하겠습니다.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9쪽입니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서 실행행률이 99.1%라고 보고하였지만 실제 정산금액 기준으로 실행행률이 51.2%에 불과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시정요구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에 실행행금액을 협약금액과 정산금액으로 구분 기재하거나 지원기업 선정 시기 일정을 변경하는 등 실행행액과 정산액을 일치시키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혹시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입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결원율은 15.7%로 중소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으로 중소기업부는 인력을 조속히 충원하여 본연의 과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 의견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제도개선 수용하고 인력 충원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권향엽 위원님.

○권향엽 위원 왜 인력 충원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연구인력이라는 직업 특성상 채용과 이직이 비교적 빈번한 상황이고 최근에 중기연 같은 경우에 예상치 못한 퇴사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예상치 못한 퇴사는 뭐 때문이었던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그것 담당 국장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직무대리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구원에서 대학으로 이전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이전 이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아무래도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보니까 서울지역 대학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하여튼 이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력 충원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11쪽입니다.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입니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은 다른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중요한데 정책자금과 수출바우처와의 연계 관련해서는 여전히 저조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중소기업부는 다른 정책패키지와 연계지원을 강화하여 정책 시너지를 제고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신청 대비 선정률은 높은 편이고 자금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특성상 용자보다는 투자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 집행률, 연계를 제고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혹시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12쪽입니다. 민관협력창업자육성 사업입니다.

프리팁스(Pre-TIPS)는 팁스 예비기업에게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선정 기업 2820개 중에 프리팁스 출신 기업이 75개, 비수도권 출신 기업은 15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쿼터제 도입, 상위 팁스와의 연계 강화 등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도개선 의견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수용하겠습니다. 지역 쿼터제 같은 경우 올해부터는 프리팁스를 100% 비수도권 전용으로 개편했다는 점 보고드립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계속해서 민관협력창업자육성 사업입니다.

글로벌 팁스는 별도 전문 운영사 없이 해당 기업과 적정 지분 취득 등 투자 책임이 없는 주관기관이 사업을 운영하여 후속 해외투자 유치 및 사업화 과정에 한계가 있고 해외 VC로부터 30만 불 이상 투자를 받아야 하는 등 신청 요건이 과도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으로 중기부는 글로벌 팁스의 해외투자 유치액을 완화하고 다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기업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 요구해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수용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신설된 사업인데 경쟁률이 3.3 대 1로 이미 높았고 선정된 기업들의 해외 VC 평균 투자액이 197만 불로 이미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 20만 불 투자 요건을 30만 불로 상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선정 기업 신청 부분도 현재도 동일 사업연도 외에는 유사 분야의 창업지원 수혜가 가능한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의견들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시정요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14쪽입니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 실행행률이 61.5%에 불과하고 과다 이월과 불용 처리가 발생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실행행률을 제고하고 실행 가능성 있는 예산을 수립하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이 부분은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조정……

○소위원장 장철민 이미 제도개선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죄송합니다.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15쪽입니다. 창업생태계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인 경산스타트업파크 사업은 국비 전액을 먼저 투입하여 선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차년도 이후에 지방비로 충당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하도록 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위반 소지가 있는 동 사업 집행 방식을 시정하라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조정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결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예외조항 적용 범위에 대해서 기재부 측과도 협의를 완료한 결과 지침 위반은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완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관 위원님, 동의하시는……

○이재관 위원 예.

○소위원장 장철민 알겠습니다. 많이 완화되는 것 같기는 한데,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성소미 16쪽입니다. 글로벌창업허브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 내용을 변경해서 딥테크 관련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것이지만 정부 주도의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정책과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글로벌창업허브 간에는 운영상 이질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의 딥테크 육성계획과 구체적 연계계획을 마련하고 자율적 운영 방식과 정부의 지원 역할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구체적 연계계획을 마련하고 정부 지원 역할을 조화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17쪽입니다. 마이스터고 육성 사업입니다.

부산기계공고 생활관 증·개축 사업은 사업 지연으로 전액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유사 사업 추진 시에 면밀한 사전 준비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견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완화 요청드립니다. 신규 편성 이후에 조달청 의견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이라는 불가피한 절차가 있었고 이후에 재발 방지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18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매년 실집행률 저조 및 과다 이월로 사업이 부진하고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효과 분석을 통해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 의견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제도개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실집행률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19쪽입니다. 상권활성화 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지만 구역 지정이 완료되지 못해서 전액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시정요구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성 검토 과정에서 지자체 등의 사전 준비 상황과 민간기구 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하게 분석할 것으로 주의 의견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사업 추진 타당성 심사 강화를 위해 중기부가 직접 최종 심의하는 절차를 도입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주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20쪽입니다. 창업인프라지원 사업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정 취소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자격을 자진하여 반납하는 건수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자격 자진반납 원인을 분석하고 수요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으로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완화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자진반납 사례는 대학의 운영 의지 부족이라든지 센터 운영비 축소 등의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21년도부터 단순 센터 유지를 위한 운영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했고 금년에는 전면 폐지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선별하여 지원 중인, 일종의 그런 결과로 생각되기 때문에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완화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21쪽입니다. 지식산업센터(자율) 사업입니다.

연례적으로 실집행률 부진과 과다 이월을 반복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집행률이 24년도에 28.7%에 불과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추진 경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견 주셨습니다.

부대의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례적으로 예산 실집행 부진 및 과다 이월 반복으로 국회로부터 지적받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자율) 사업의 지역별 사업 승인 및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먼저 시정요구사항 중에서는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완화 요청드립니다. 이유는 저희가 단년도 사업을 3년으로 연장하고 신규 센터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 개선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고 관리 중인 43개 센터의 상황이 각각 상이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권향엽 위원** 그런데 차관님, 이게 지금 보니까 매년…… 2018년도에 제도개선, 2019년도에 주의, 2020년도에 제도개선, 그다음에 2023년도에도 제도개선,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4년도에 실집행률이 28.7%밖에 안 돼요. 이게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그래서 저희가……

○**권향엽 위원** 개선을 하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개선이 현저하게 더 안 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사실 준비되지 않은 센터에 대해서는 예산이 배정이 안 되는 게 맞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신규 센터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서 저희가 기재부 측에 보내고 있는데 그쪽에서 검토하면서 저희 의견하고는 다르게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좀 더 적정성 검토를 강화해서 준비된 센터들이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 기재부 차원에 가 가지고 쪽지예산이든 뭐든 해 가지고 반영돼서 살아서 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사실 이게 자율 계정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좀 정도가 심한 것 같아요. 이것 잘 좀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오세희 위원님.

○**오세희 위원** 지금 이 예산이 637억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맞습니다. 자율 계정만 그렇고 제주하고 세종까지 합하시게 되면 732억……

○오세희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너무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이것을 좀 축소해서, 불용이 이렇게…… 30%가 안 되면 이걸 분명히 재고를 해 볼 만하거든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많다, 한 700억 정도 되면.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위원님, 다만 지자체 수요라는 측면이 또 있어서 저희가 그런 점도 조금 감안이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이게 지특 자율 계정 성격상 사실은 아까 기재부 얘기도 얼핏 하셨는데, 지자체 광역단체들이 실링 안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항들이 있고 사실 저희 국회도 구체적으로 손을 거의 못 대는 수준이라서 이것은 연례적인 문제 제기가 있기는 하지만 또 그렇다고 뾰족하게 저희가 이것을 다 취소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제도개선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조금 더 디테일한 사항들은 중기부에서 상임위 때나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제도개선으로 하고 부대의견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지식산업센터 제주·자율·세종 사업입니다.

수정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자율 사업에 대해서는 직전에 벌써 의견을 합치해 주셨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은 직전 사업과 동일합니다. 주의 의견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앞 4번과 마찬가지로 제도개선으로 완화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앞엿것하고 내용적으로 일관성을 위해서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성소미 23페이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입니다.

기타민간이자수입과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사업입니다.

중진기금 융자사업은 장기연체 또 체납자 재산 미보유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 처리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시정요구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전 책임경영심사의 충실화 또 사후 정책자금 위험관리 조치 실질화 등 리스크 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사전 책임경영심사 내실화 하고 사후관리 시스템 고도화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성소미 24쪽입니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입니다.

2017년 사업 개편으로 중소기업 외에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됐지만 지원실적 그

리고 수출 사업화 성과를 구분 관리하지 않아 사업성과 파악 및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여부 식별을 위한 자료 수집·연계 체계 마련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용자 신청, 지원 실적 구분 관리를 통하여 용자 조건·지원전략 개선과 성과평가체계 구축에 활용하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이 포함된 정책 목적 등을 고려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별도 구분하고 실적 및 성과관리 추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성소미 25쪽입니다. 밸류체인안정화자금 사업입니다.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은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 용자 팩토링자금을 연 1회 운용하고 있어 자금운용의 효율성이 낮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시정요구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채권팩토링 회수자금을 활용해서 회전율을 높이고 효율적인 자금운용과 충분한 유동성 공급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자금운용방식을 개선할 것으로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부처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원칙 등이 있기 때문에 2회분, 2회전 등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예산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혹시……

○권향엽 위원 그러면 이거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팩토링자금 2회전 이상은 재임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건가요?

○소위원장 장철민 시정요구 자체를 변경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지금 차관님이 설명을 하신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저희가 예산 당국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26쪽입니다.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하기 위해서 국회 심사단계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이지만 집행단계에서 정부가 지원대상을 제한하여 800억 원이 불용 처리되었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시정요구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의 증액사업 취지에 어긋나는 소극적인 예산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지원대상 선정 등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이라는 의견으로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완화 요청드립니다. 수요 예측상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지만 이후에 신속한 집행준비, 환급요건 완화 등 집

행노력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상웅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취지가 고금리대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5~7%니까 그렇게 고금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박상웅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비은행권이라고 하니까 대개 금리가 5~7% 정도 수준이 됩니다, 비은행권이니까. 그런데 이 비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그래도 양호한 운영 실태를 갖고 있는 업체가 5~7%의 대출금리 혜택을 보고 있는데 경영 상태가 좀 어려우면 7%를 초과하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위원님, 고금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환대출을 통해서 중금리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래서 그렇게 대환보증이나 대환대출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은 이 사람들이 배제된 것 아닙니까, 이 혜택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5~7% 금리만 해당이 됩니다.

○박상웅 위원 굳이 5~7%로 그 구간을 확정해 놓을 필요가 있었나요?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시작한 취지인 것 같은데 웬만큼 양호하게 잘 견디고 있는 사람들만 골라 가지고 지원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느 정도 포기하는…… 그래서 망할 사람 빨리 망하는 게 안 좋겠나 우리 모두를 위해서, 뭐 이런 속내가 좀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그런 속내는 없고요. 다만 배경을 좀 더 말씀드리면 당시에 은행권 이자환급이 4% 초과 금리에 대해서 시행되면서 비은행권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년 12월에.

○박상웅 위원 그렇게 구간을 정해 버리니까 결국은 불용액이 800억이나 나오고 쓰지도 못하고.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래서 패자부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뜻깊은 정책으로 좀 가야지, 쉽게 가려고 그렇게 구간을 정해서 살짝만 거들어 줘도 잘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업만 골라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조금 취지에 안 맞다는 생각도 드는데……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그런데 위원님, 비은행권, 아까 말씀하신 2금융권도 사실 금리가 대부업체하고는 다르게 5~7% 수준에 많이 계셔서 그렇게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상웅 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이 문턱을 못 넘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대환대출이나 별도 대환보증을 통해서……

○박상웅 위원 800억 마저 써 버리지. 문턱을 낮춰서 어려운 사람들을 좀 살려 주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그 부분 저희가 불용 발생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상웅 위원 그것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회 예산심사 단계에서 편성하면 완벽한 시뮬레이션으로 완벽한 예측을 한다

는 것도 사실 어렵고요 그리고 기금이니만큼 어느 정도 버퍼를 뒀서 편성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27쪽입니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입니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이차보전사업은 R&D 사업비 감액 기업의 신청도 저조했고 또 집행률 역시 34.8%에 불과하였음에도 신청 기간을 조기 마감해서 상당 부분 예산이 미집행 불용 처리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신청 기간을 집행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원 수요를 반영한 적정 규모 예산편성으로 불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차례 사업안내를 드렸고 추가 신청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7월 말에 중단했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28쪽입니다. 채도약지원자금(융자)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통화완화정책 기조에 따라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되었음에도 수요자들의 체감금리는 상승해서 상환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역효과가 났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중소기업부는 정책자금 대출조건 결정 시 기준금리에 경제상황과 통화정책 등을 반영하거나 성과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등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금리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금리 시기에는 조달금리를 유지했었고 중진채권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소폭 인상했다는 점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적정 수준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29쪽 기술보증기금입니다.

기술보증대위변제 사업입니다.

금융 당국의 유동성 지원 확대에 따라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낮게 유지되었던 보증 사고율이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서 대출 연체율과 보증 사고율이 증가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중소기업부는 사고율 급증과 기금의 급격한 재정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하는 한편 기금의 재정건전성 유지와 보증 리스크의 누적 방지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병행할 것으로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9월 이후에 사고율 상승이 사실상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기보에 대해서 이 자료에 저도 같이 보증 사고율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 말씀을 드린 것이 있고 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대안을 말씀드렸었던 건데, 기보는 기본적으로 사고율보다 기술의 혁신성이라든지 우수성에 초점을 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고율이 높을 수도 있고 또 저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점을 사고율보다는 기술의 우수성 판단에 가장 큰 베이스를 두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렇지요. 경기가 안 좋은데 사고율이 안 올라가면 그게 더 이상하지요. 어쨌든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30쪽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시 재단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을 3954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307.9%가 지출되어 정부출연에도 불구하고 5466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보증 사업의 수지차보전 예산편성 시 최근 추세를 반영하는 등 실제 결산상 적자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중요 변수들의 현재 상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31쪽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내역사업은 사업수요를 과다 예측하여 예산집행이 부진하고 유사 후속사업의 관리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유사한 에너지비용 지원사업 추진 시에 정확한 통계에 기반하여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으로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제도개선으로 완화 요청드립니다. 수요 예측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지만 이후에 지원대상 확대 등 집행 노력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오세희 위원님.

○오세희 위원 지금 90만 명 정도,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오세희 위원 이게 정산에 대한 문제이고 한전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맞습니다.

○오세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불용 처리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한전하고 관계에서 정산이 어떻게 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정산이 요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도 있고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증빙을 받아서 지원해 드리는 투 트랙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오세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에너지 지원사업 추진에서 사업 계획이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금년에는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변경된 바 있고요. 전기료 포함해서 4대 보험하고 가스라든지 연료비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세희 위원 지금 1억 400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억 400까지 한도를 확대했었습니다.

○오세희 위원 1억 400인데, 1억 400 가지고 하면 한 달에 자영업자 가게가 800만 원 수익이거든요. 그렇지요? 순수익이 아니라 총매출이.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맞습니다.

○오세희 위원 800만 원은 너무 낮다는 거지요. 그냥 임대료하고 인건비인데, 재료비하고. 그래서 이거는 금액을, 매출 상한을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그래서 금년에 한 부담경감 크레딧은 3억까지 올린……

○오세희 위원 보통 지금 중기부에서 하는 게 1억 400을 취약계층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3억으로 조금 높여야 되지 않을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간이과세 기준으로 저희가 원용하다 보니까 1억 400으로 했는데 금년 사업은 3억으로 조정했습니다.

○오세희 위원 예.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추가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이어서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입니다.

중소유통 통합물류시스템 신규 구축 내역사업은 일부 지역에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물류관리시스템을 사용해서 활용이 미흡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규 통합물류시스템이 일선 공동도매물류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안내를 통해서 신규 물류시스템 사용을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계속해서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상권역량강화 내역사업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에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

이월된 보조금으로 대금을 집행해서 국가재정법상 회계 독립의 원칙과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상의 보조금 이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시정요구는,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사업자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가재정법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보조금의 이월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으로 주의 의견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향후에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과 보조금 이월규정 준수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34쪽, 계속해서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입니다.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 내역사업은 2024년 재지정 심의 목표 대비 실집행이 저조하고 신규지정 실적도 없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시정요구는,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정확한 수요 예측에 기반하여 예산을 책정하고 사업 내실화와 적극적 신규 지정을 병행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으로 주의 의견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완화 요청드립니다. 사유는 2024년 7월에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백년소상공인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재지정 심사가 불필요하게 되어서 해당 심사비가 이월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점 감안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합리적이네요.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35쪽 소공인특화지원 사업입니다.

소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내역사업은 연례적으로 이월 또 재이월이 반복되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정요구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지침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주의 의견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주의를 불수용으로 완화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예비공모제도를 도입해서 지식산업센터와 유사하게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있고요 예비공모 통과한 지자체만 대상으로 본공모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준비 미흡 지자체 신청 방지함으로써 이월 방지 등 집행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36쪽 소상공인재기지원 사업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내역사업은 보조사업비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운영경비로 집행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 목적과 무관한 다른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주요사업비로 기금운영비성 지출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시정 또는 주의 의견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시정을 주의로 완화 요청드립니다. 소진공 기본경비 부족 상황에 대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합니다라는 당시로서는 소진공 기본경비 부족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의로 하시는 거를 동의하시는 건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발되면 안 되는 일이긴 하네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이거는 기본경비에 드는 부분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산 당국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요구는 주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소상공인재기지원 사업입니다.

원스톱폐업지원 내내역사업은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자의 약 30%가 탈락했는데 신청자 입장에서 신청요건을 사전에 판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 개인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보완하거나 간편 상담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신청 편의 제고 방안 마련할 것을 내용으로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오세희 위원님.

○오세희 위원 이 부분에서 30%가 탈락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너무 탈락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이게 단순 체크리스트를 하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본인 자격요건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오세희 위원 지금 4만에서 한 1만 2000건이 그렇잖아요. 굉장히 많은 건데, 대상자 조건이나 명확한 기준 제시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계속해서 소상공인지원 사업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내역사업은 가입률과 또 지원 규모도 실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수급조건 완화 등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부대의견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보험 수급조건이 까다로워 가입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자영업자의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한다’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고용부와 정책협의체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혹시 위원님들……

오세희 위원님.

○오세희 위원 지원이 이렇게 고용보험까지 있는데 왜 가입률이 낮냐면 그거에 대한 비전이나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이게 80%를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4만 얼마에서 지금 내는 게…… 별로 납부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맞습니다.

○오세희 위원 그런데도 왜 이걸 이용을 안 하나면 ‘내가 이걸 넣었는데 나한테 돌아올까?’, 그러니까 기준을 확실하게 제시를 해서 참여율이 높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의 복지에 관한 건데 이걸 놓치는 것 같습니다. 명확한 기준하고 본인들의 신뢰감,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5년 경과 후에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추가 가입을, 연장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부분도 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세희 위원 지금 한 달에 폐업이 6만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안 들 때는 ‘나한테 돌아올까?’ 이런 의문사항이 많은 거지요. 그러니까 기준을 정확히 해서 ‘당신들의 복지가 된다’ 그거를 좀 정확하게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그런데 신규가입도 중요한데 사실 기존 가입자분들이 5년 후에 탈퇴를 해 버리시니까, 5년 동안 뭔가 혜택을 누렸다는 느낌이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좀 잘 하겠습니다.

부대의견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이것 매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가입률 자체가 너무 낮아서. 그런데 이게 중기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고용노동부와 아니면 그 이후에 전국민 고용보험, 전국민 소득보험 체계로의 전환 같은 것까지 다 사실 이루어져야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라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39쪽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중·저 신용자 대환대출은 지원 실적이 저조해서 적시에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최종 집행액이 25.2%이고 대환대출은 당초 편성액 대비 49.8%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을 위하여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차주의 신용도·부실 정도 등 사업 운영정보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시중은행 간 적절한 위험분담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부대의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추가 재원 마련 등을 위해 복권기금 활용 등 자본잠식 방지 대책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한다’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을 위한 심사 절차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고 싶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차주의 신용도·부실 정도 등 사업 운영정보 파악 시스템 구축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 번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시중은행 간 적절한 위험분담 방안은 현재도 대부분 보증부 대출이기 때문에 85% 이상 이미 위험이 분담돼 있는 상황이라는 점 감안해서 이 부분은 철회를 요청드리고 싶고요.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오세희 위원님.

○오세희 위원 지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소진공이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오세희 위원 소진공이고, 대환대출은 시중은행.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오세희 위원 지금 대환대출은 500억이 불용됐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오세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돈을 못 빌려서 어디에서 빌릴까 하는데 이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이 되는 거는 뭔가가 진입 문턱이 높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돈을 대출을 못 받아서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용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7%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고수를 하기 때문에, 7% 이상을 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조건이 좀 턱이 높다. 그럴 때는 조금 낮추는 것도 어떤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황영호입니다.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지금 민간의 7.5% 이상의 고금리를 사용하시는 소상공인들이 4.5%, 좀 낮은 금리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인데 이 상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은행 창구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낮은 금리로 동의할 수 있도록 담당

자가 그 부분을 허용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들이 매뉴얼 숙지랄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집행이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숙달도도 좀 높아졌고 해서 지금은 이제 점점 더 사용하시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중은행 창구나 이런 데와 협조를 하면서 실제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불용이 됐을 때는…… 지금 돈이, 대출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문의가 많이 오는데 이걸 좀 낮은 조건으로 완화…… 금융권이 지금 심사를 너무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조화롭게 한번 조율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황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정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진공과 시중은행 간 위험분담 방안 마련할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 요구로 정리하고 부대의견은 그대로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40쪽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사업입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내역사업은 판매촉진금 일부가 상인연합회의 경상적인 운영비로 집행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시정요구는, 중소기업부는 상인연합회 및 지회에 지급되는 판매촉진금이 본래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목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률이 개정된 점을 감안하여 적정 규모의 보조사업을 별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완화 요청드립니다. 판매촉진금은 상품권 판매 활성을 위해 지급한 건 사실이지만 지회 운영비의 부족 상황을 감안해서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시장법 개정에 따른 운영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오세희 위원님.

○오세희 위원 이거는 지금 할인율이 운영비가 없어서 미집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5%·10%였는데 10%·15%로 된 거잖아요, 할인 금액이.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그거는 뒤에 나오는 거…… 이거는 지회의 운영비로 썼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41쪽입니다. 계속해서 온누리상품권 발행 관련 사안입니다.

당초 국회에 제출된 할인율에 비해 높은 할인율로 상품권을 발행함으로써 할인보전금을 계획 대비 과도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실제 발행 규모는 계획 대비 미달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시정요구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 수행 시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기금운용계획상의 할인율을 준수하고 당초 상품권 발행 목표를 달성하여 상품권 사용의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수요 예측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부대의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 고소득 전문업종을 제외하고, 발행목표액 달성 위주의 할인 확대를 지양하며, 전통시장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는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먼저 시정요구사항 주의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수용하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앞으로는 정해진, 계획된 할인율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15%·10%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없어서 5조에서 7000억이 미집행됐지요? 그렇지요? 할인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앞에서 나왔던 걸로, 판촉비 일부를 지회에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10%·15%는 할인율……

○오세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할인율의 운영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할인율이 원래 5%·10%인데 추가적으로 더……

○오세희 위원 하여튼 이거는 병원하고 그다음에 동물병원하고 학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취지는 전통시장 살리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나친 확대를…… 지난 정부에서 5조라는 것 때문에 확대를 해서 취지하고 다르게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너무 확대를 과하게 하지 말고 전통시장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부대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부대의견은 수용하고 앞에 있는 사안은 아까 제도개선으로 말씀 주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주의로 수용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시정요구는 주의로 그리고 부대의견 수용하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42쪽, 계속해서 온누리상품권 발행 관련입니다.

2024년 현장조사 결과 고액 매출 가맹점 449곳 중에 134곳에서 부정유통이 적발되었다고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에 시정요구는,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점 관리 강화,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장기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완화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제도개선으로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권향엽 위원 지난번에 이 건에 대해서는, 부정유통 적발이 너무나 심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현재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서는 5조로 늘렸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게, 저희도 늘상 가서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많이 쓰여야 할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이 제대로 못 쓰이고 있다는 그 현실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는 차원에서 저는 주의로 갈 것을 제안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서일준 위원님.

○서일준 위원 차관님, 부정유통의 사례가 주로 어떤 사례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예, 국장이 말씀해 보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 이대건입니다.

보통 브로커 통해 가지고 카드깡 해서 발생……

○서일준 위원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관 이대건 예.

○서일준 위원 지금 449곳 중에 134곳이면 3분의 1인데, 지역사랑상품권도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도 이것 근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관 이대건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국회에서 크게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고액 가맹점 플러스 주류 위주로 취급하는 업종 449곳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현장 조사해서 일단 130개 이상이 문제되고 거기에 합당한 처분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FDS라고 해 가지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그 간에 연 1회밖에 못 봤습니다. 그 부분도 좀 송구스럽게 생각해서요 작년부터는 매월 금결원에 자료를 보내서 금결원이 모니터링해 주면 저희가 월별로 문제가 있는 것을 타이트하게 현장 조사해서 조치 취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일준 위원 부정유통 사례별로 해서 우리 의원실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만약에 브로커다 이러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지금 관련 법안도……

○서일준 위원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온누리상품권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도 유통이 될 건데 이건 엄청나게 국가 예산을 좀먹는 그런 행위거든요. 이것 특별하게 관리 방안을 한번 마련해 가지고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잠깐만 추가 설명드리도록……

○서일준 위원 예.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일단은 저희가 생각할 때 지류가 가장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지류를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이 보고한 대로 이상거래감지시스템을 좀 더 자주 체크를 해서 즉시 적발하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14세 미만 같은 미성년자의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금지하는 등 각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류 상품권 사용을 단계적

으로 축소해 나가는……

○**서일준 위원** 그런데 지류는요, 디지털 하면 전통시장이라든지 연세가 좀 많으시면 쓸 수가 없어요. 지류를 안 쓸 수가 없다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 부분은……

○**서일준 위원** 그걸 하여튼 잘 분석해 가지고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전통시장이 많이 있는데 전통시장에서 어르신들 모바일 쓸 수 없다 그 말씀들을 해서 계속 지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실제 사용하는 데는 지류가 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1만 원짜리 온누리상품권 내고 3000원 잔돈 내주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불편해서, 저는 아이디어 차원으로 우리 지자체에다가는 QR코드를 아예 목걸이형으로 만들어서 한쪽은 지역사랑상품권, 한쪽은 온누리상품권을 같이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QR만 쏘으면 바로 결제될 수 있도록 그것 한번 강구해 봐라,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쓰여야 할 곳에서 쓰여야 되는데 왜 쓰지 않을까를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말씀하신 대로 앱 고도화 방안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그런데 위원님들 대체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보다는 그냥 주의로 시정요구를 하기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정요구는 주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43쪽입니다. 계속해서 온누리상품권 발행 관련 사안입니다.

이번에는 감사요구 관련 사안입니다.

관리 부실과 제도적 미비로 인해서 대규모 부정유통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료제출 거부 및 불완전한 제출로 국회 차원의 실증적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감사요구 의견을 주셨는데요. 감사원이 직접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결제원, 금융정보분석원, 대구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자료를 확보·분석하여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실태 및 규모, 관리 부실의 책임 소재, 제도개선 방안, 금융기관의 관여 정황, 국회 요구자료 미제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도록 감사를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정부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다각적인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제출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개인정보 보호나 수사 관련된 일부 사항이 부득이하게 제출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시정요구 형태로 완

화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시정요구는 그러면 어떤 수준으로 해야 될까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받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이게 작년에 사실은 제가 국정감사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사안이 커진 이유도 어떻게 보면 FDS 자료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만 중기부가 체크를 했어도, 소진공이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만 체크를 했어도 이 정도까지 부정유통이 커지지 않았을 거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끊임없이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작년에 지적해서 나름 히트한 게 그런 거였잖아요. 마늘 가게에서 한 달에 수십억씩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게 사안이 크게 불거졌던 거라 정말로 가맹점의 매출 데이터 정도만 체크했어도 사실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관련된 자료들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국회나 저희의 요구에 정확하게 제출하기만 해도 사실은 이런 종류의 부정유통이 이렇게 커지지 않을 거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저도 사실은 감사원 감사요구는 이후에 이 관련 자료들을 저희한테 더 보여 주시고 하신다면 저희가 이후에 국정감사나 여기에서 감사를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감사원 감사요구는 철회를 하고요. 다만 ‘부정유통 실태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이후에 미제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정도의 부대의견은 남겨 놓고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그 정도의 부대의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실태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이후 자료 미제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는 수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다음 항목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마지막으로 이어서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혁신은 마케팅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물리적 공간의 편의성 증진 및 현대화를 포함한 리모델링 사업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정요구는, 중소벤처기업부는 타 내역사업과 연계해서 전통시장 현대화 등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효율성 및 사업성과 향상을 모색하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 의견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저희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이 지자체 시설현대화 사업과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현황을 지자체와 수시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정리하면 바로 의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로 정회 없이 정리되는 것 좀 기다렸다가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다 받으셨지요?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리한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소위 시정요구 결과 주의 8건, 제도개선 33건, 소계 41건이고 부대의견은 6건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시정요구 결과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부대의견들 확인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된 자료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용석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한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 결산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구자근 권향엽 김동아 박상웅 박지혜 서왕진 서일준 오세희 이재관 장철민
정동만

○출장 위원(1인)

허성무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전문위원 성소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문신학
제2차관 이호현
정책기획관 안창용
산업정책관 강감찬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 박덕열
산업공급망정책관 나성화
통상협력국장 김종철
무역정책관 서가람

지역경제정책관 김호철

전력정책관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

수소경제정책관 최우혁

원전전략기획관 양기욱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노용석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우중

중소기업정책실장직무대리 김정주

글로벌성장정책관 이순배

기술혁신정책관 박용순

지역기업정책관 권순재

창업정책관 조경원

벤처정책관 김봉덕

소상공인정책관 이대건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황영호

특허청

청장 김완기

기획조정관 구영민